

# 경제 지표 및 산업 구조

경제 지표는 한 국가의 경제력과 경기 변동과 관련하여 장래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국가지도집에서 사용하는 경제 지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 실업률, 1인당 직업 수, 중위 가구 소득,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제 지표 기준으로 중위 소득, 남성 중위 소득, 여성 중위 소득 등 소득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산업별 부가가치액, 무역과 국제 수지, 연구 개발 활동, 지방 재정 등의 통계 지표들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역 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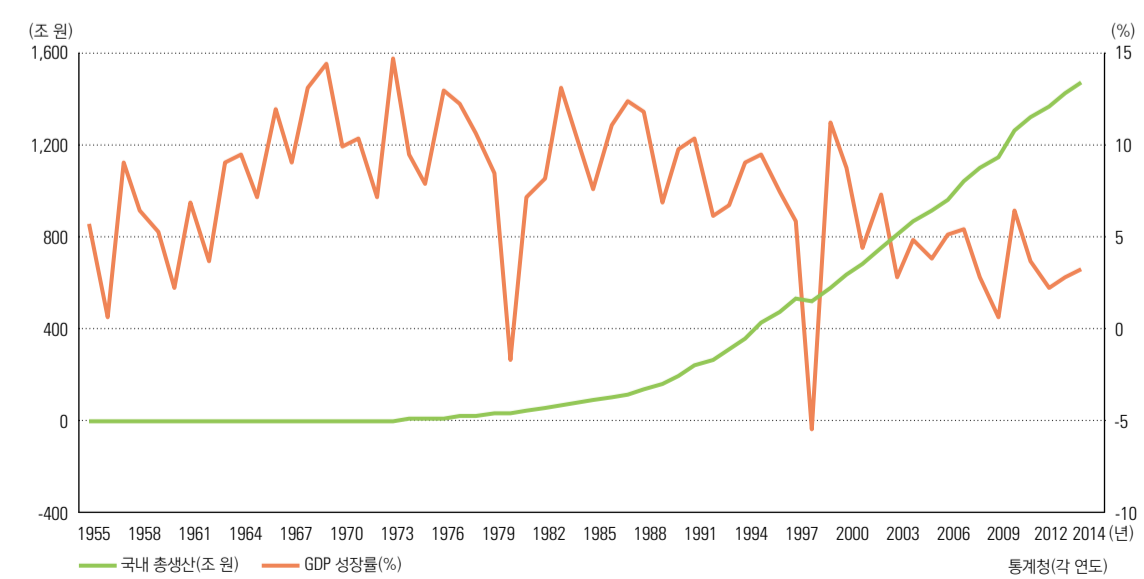
서 새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제 관련 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은 국가 범위로 확장하면 국내 총생산(GDP)이 되지만, 추계 시 이용하는 자료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계은행(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명목 기준)은 2014년 현재 1조 4,103억 USD를 기록하여 세계 12위를 차지하였고,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는 13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1971년 100억 USD를 돌파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10배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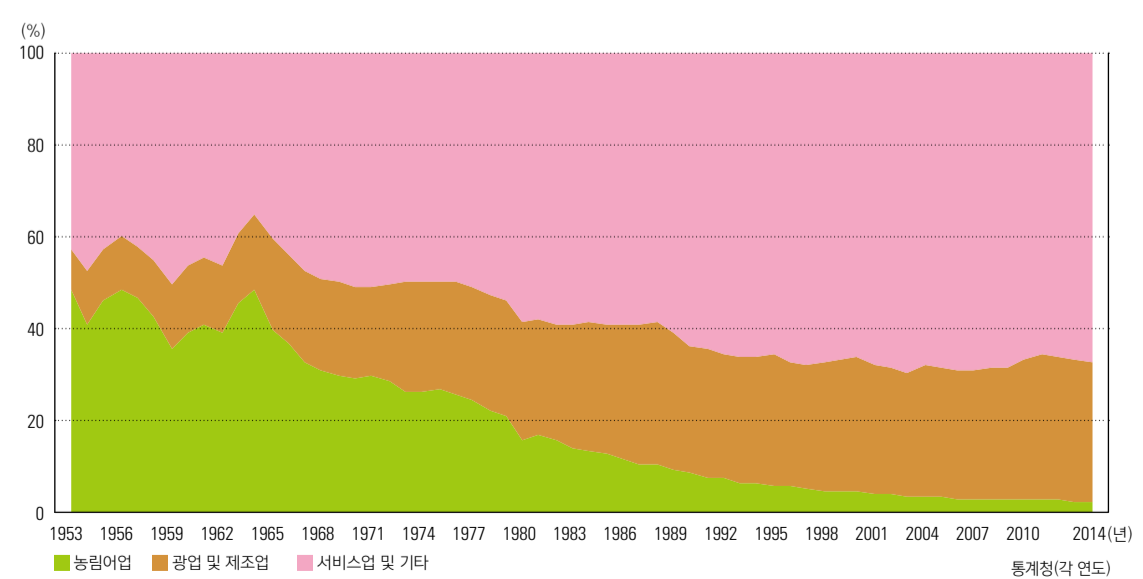
여 1985년에는 1,000억 USD를 돌파하였다. 100억 USD 돌파 35년만인 2006년에는 100배 증가한 1조 USD를 돌파하여,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약 5%에 머물렀으나, 1960년대(1961 - 1970년) 9.5%, 1970년대(1971 - 1980년) 9.3%, 1980년대(1981 - 1990년) 9.9%의 성장률을 보여, 1960년대 이후 상당 기간 거의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1991 - 2000년)에는 7.0%, 2000년대(2001 - 2010년)에는 4.4%로 성장률이 떨어져,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4% 미만의 성

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 부문별 국내 총생산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어업은 1953년 48.2%에서 1970년 28.9%, 1990년 8.4%, 2014년 2.3%로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한편, 광업 및 제조업은 같은 시기 8.9%에서 20.4%(1970년), 28.0%(1990년), 30.3%(2014년)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및 기타도 42.8%에서 50.7%(1970년), 63.6%(1990년), 67.4%(2014년)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1970년대 이후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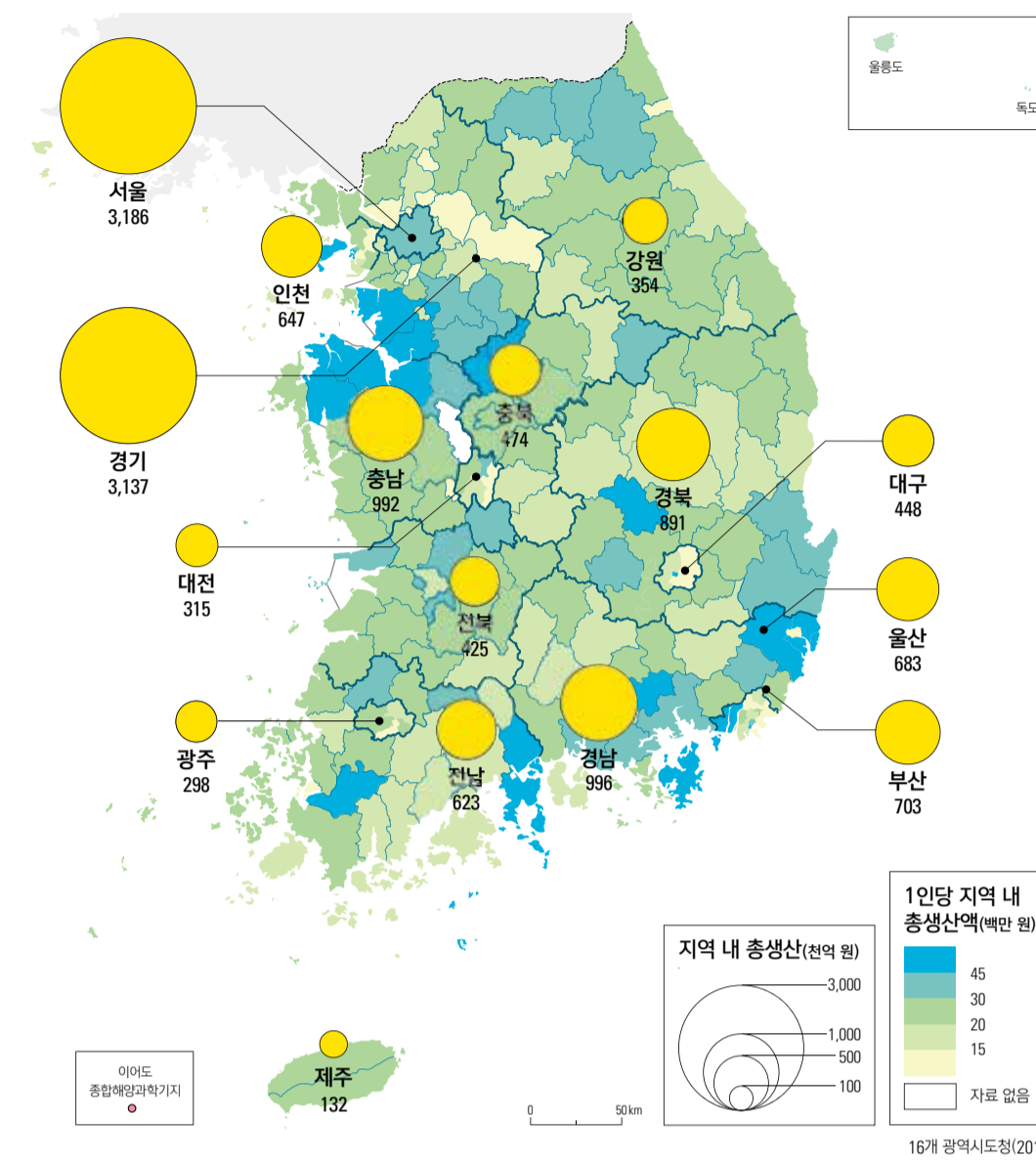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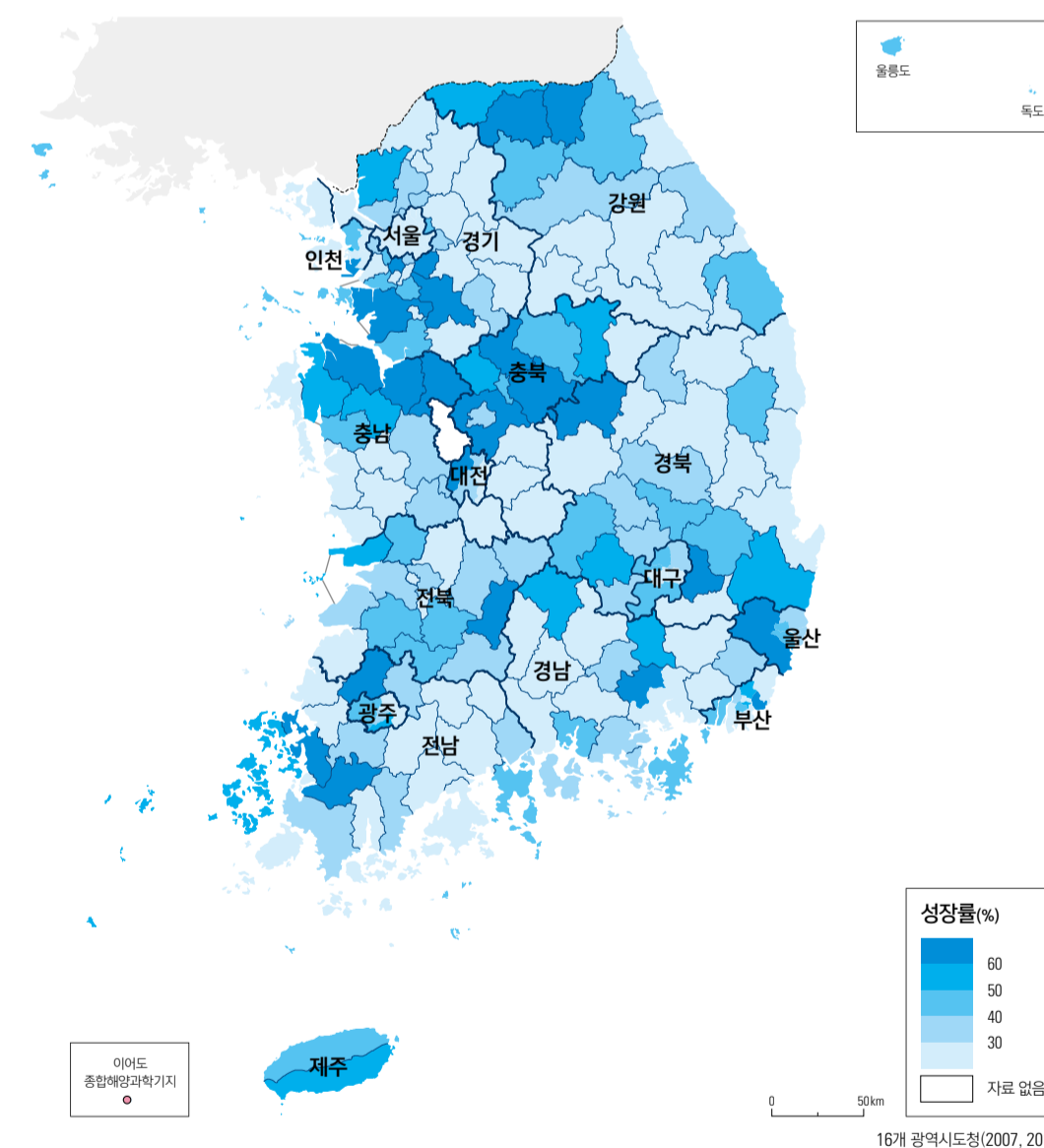


##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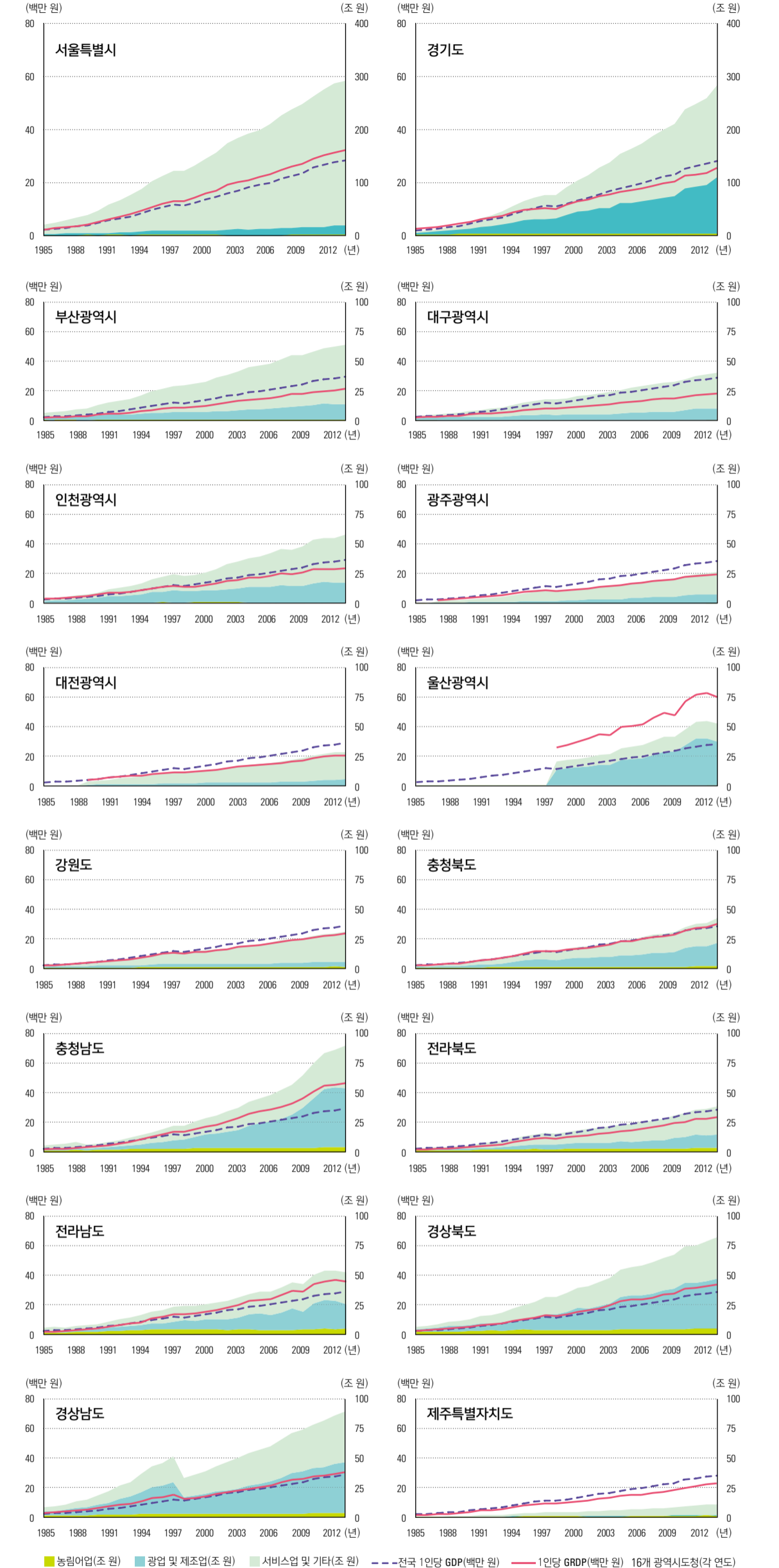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2012년)



지역 내 성장률(2007 - 2012년)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1985년과 2013년의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급성장이 두드러지는데, 1985년에는 서울 22.9조 원, 경기도 12.5조 원으로 경기도의 총생산이 서울의 약 55%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서울 318.6조 원, 경기도 313.6조 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정도로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였다. 농업·어업은 모든 지역에서 비중이 감소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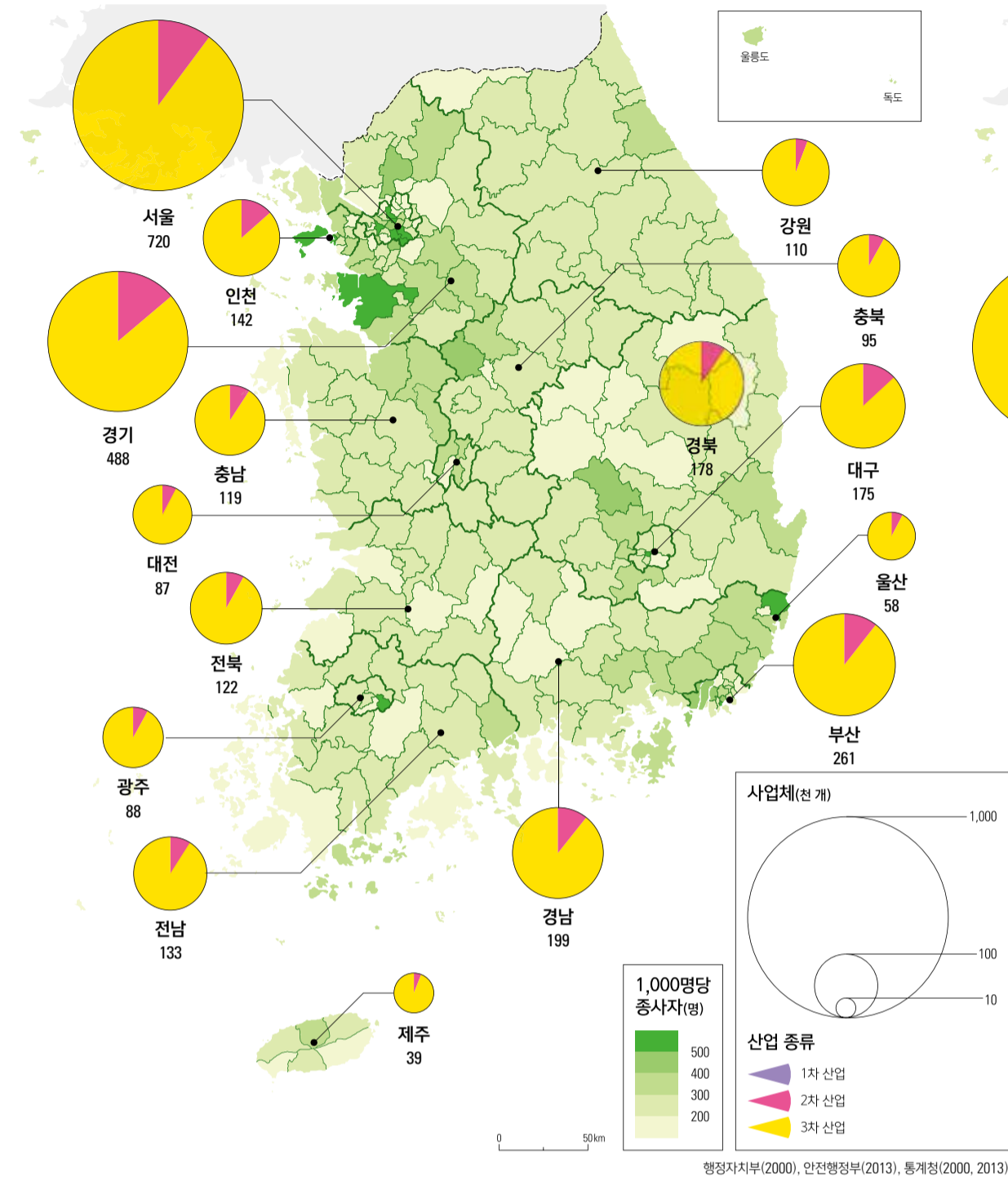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은 모든 지역에서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이 1985년 87.9%에서 2013년 93.2%로 증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은 광역시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지역의 제조업 성장이 두드러진다.

2012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산(8,969만 원), 영암(8,059만 원), 당진(7,297만 원), 여수(7,168만 원), 광양(6,968만 원), 구미(6,345만 원), 울산(6,342만 원), 서산(6,077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양주(936만 원)와 목포(1,334만 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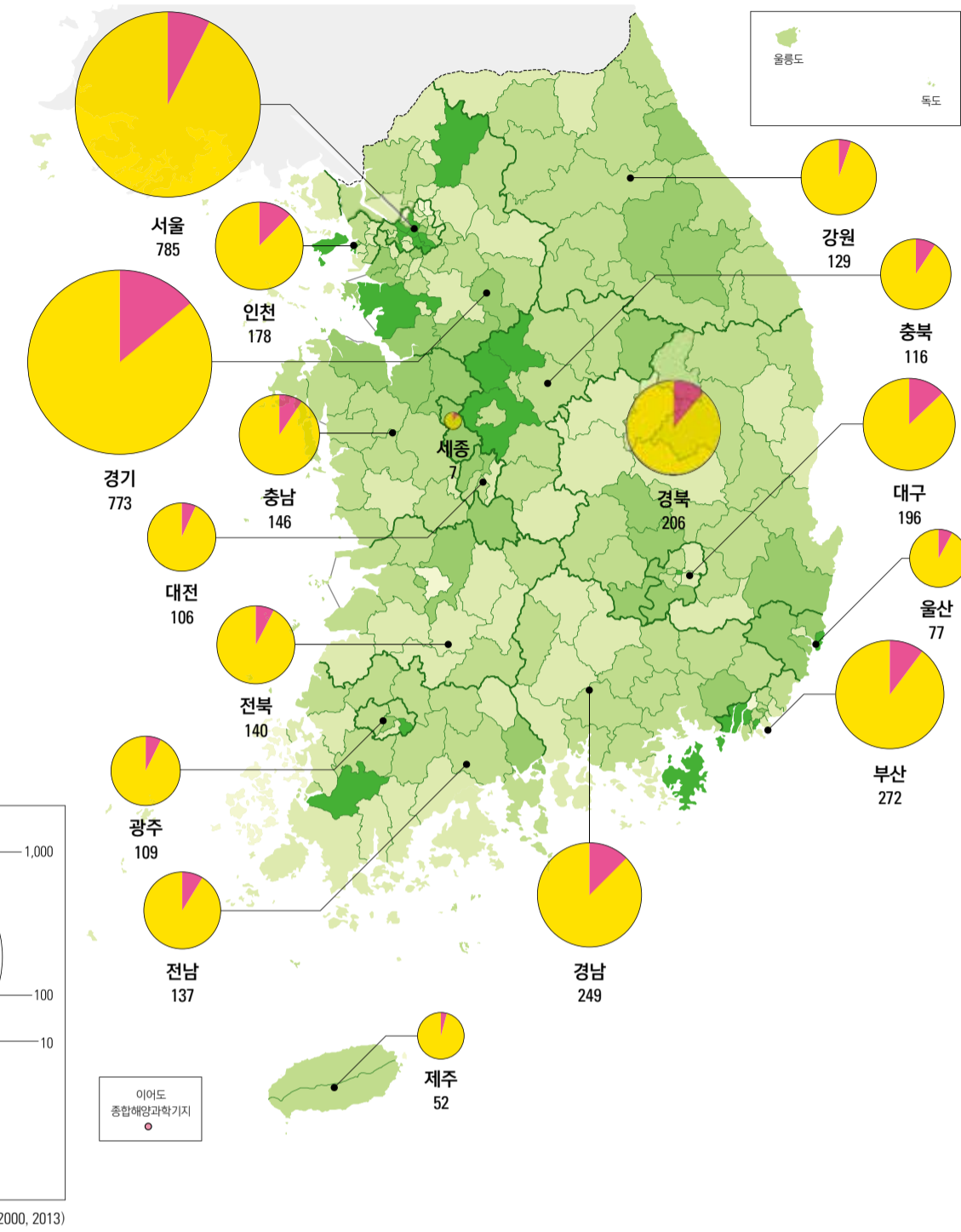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지역 내 총생산 지표를 바탕으로 시·군별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당진(136.4%), 무안(115.5%), 아산(100.5%), 오

산(93.8%), 문경(88.1%), 용인(83.8%), 화천(78.1%), 성남(77.2%), 화성(76.3%), 천안(71.8%) 등의 순으로 나타날 수도된 이남과 충청권의 지역 경제가 두드러지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울진(-33.3%), 영광(-21.4%), 정선(-10.4), 청송(-5.0%), 화동(-4.2)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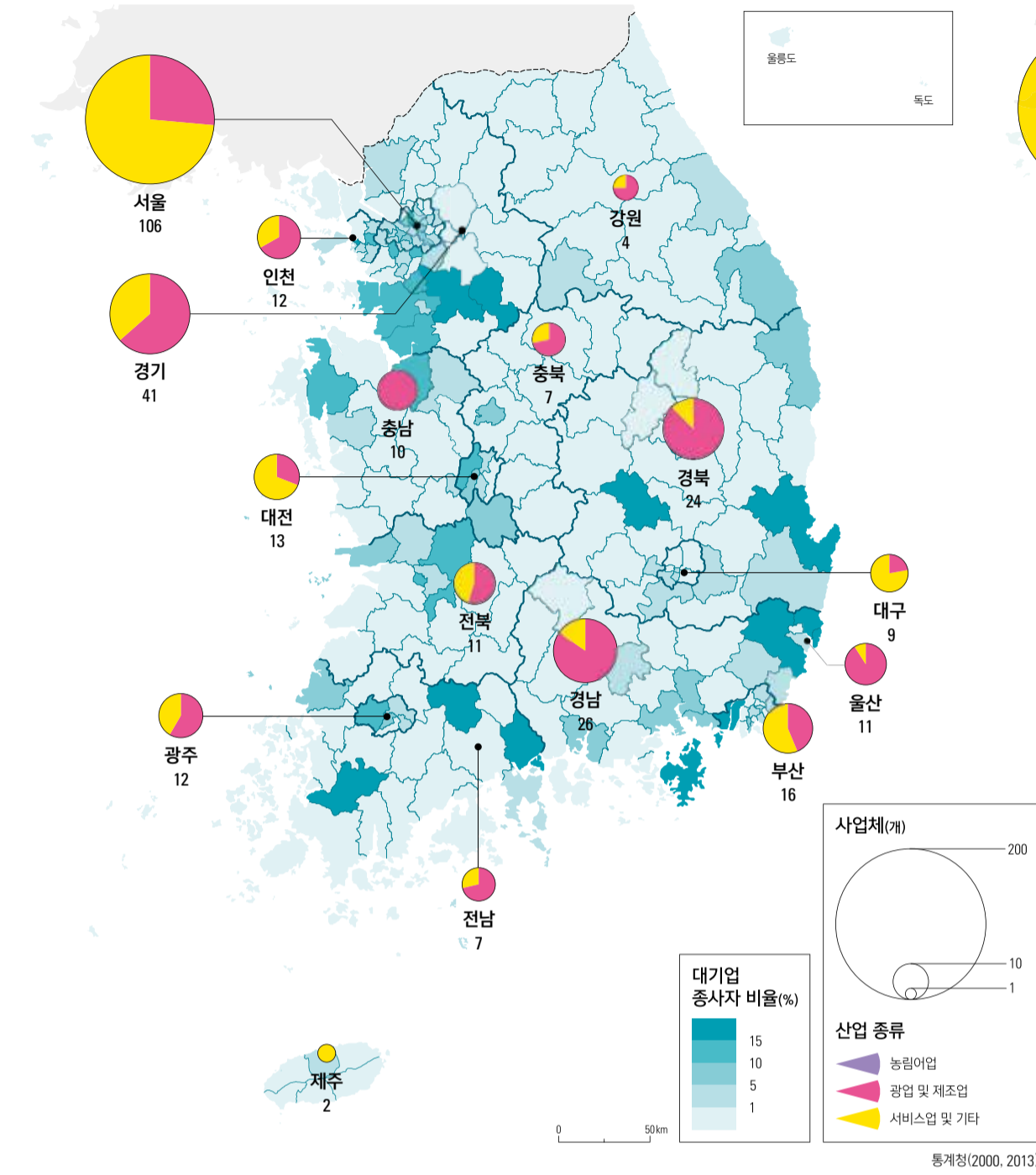
사업체와 종사자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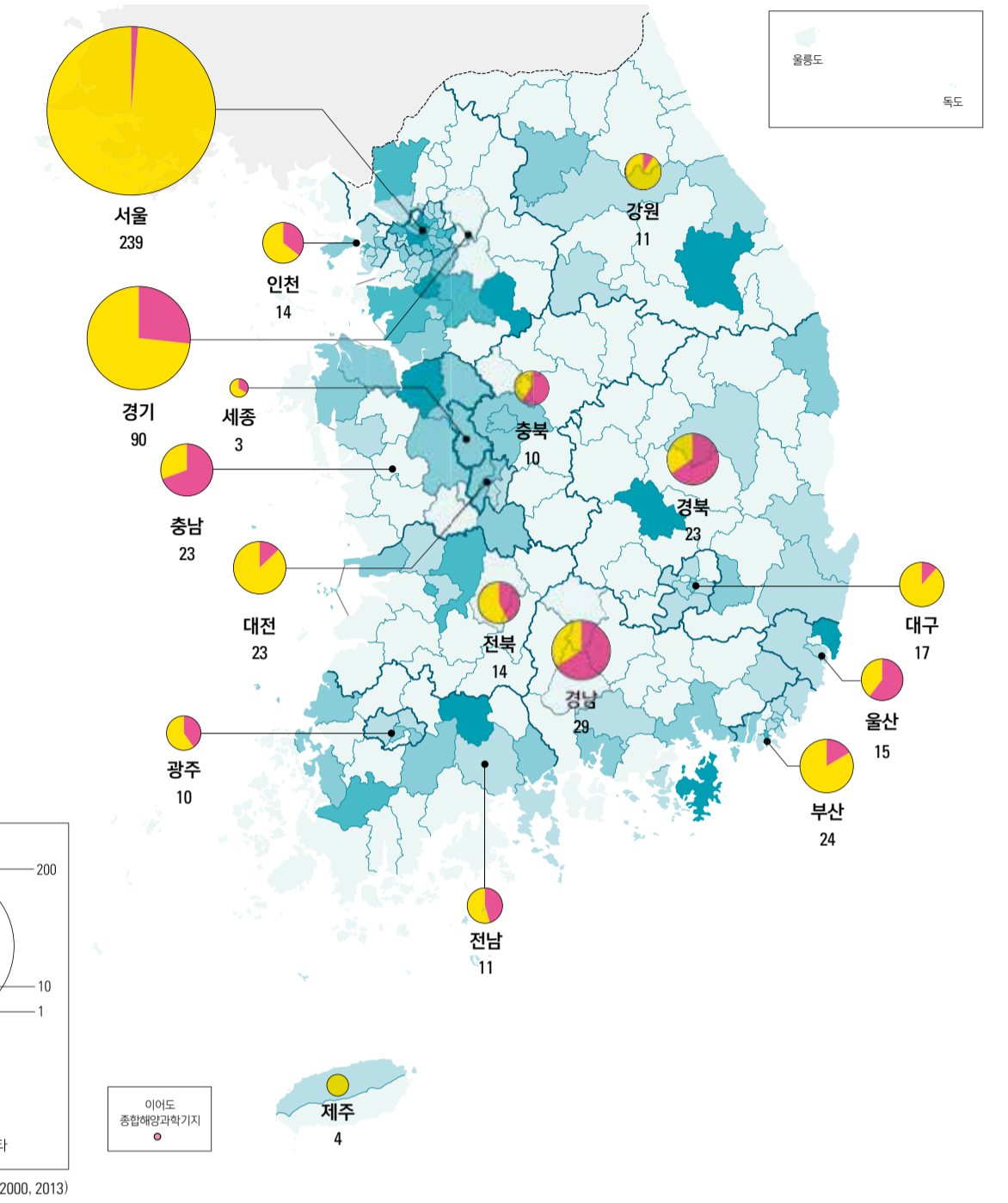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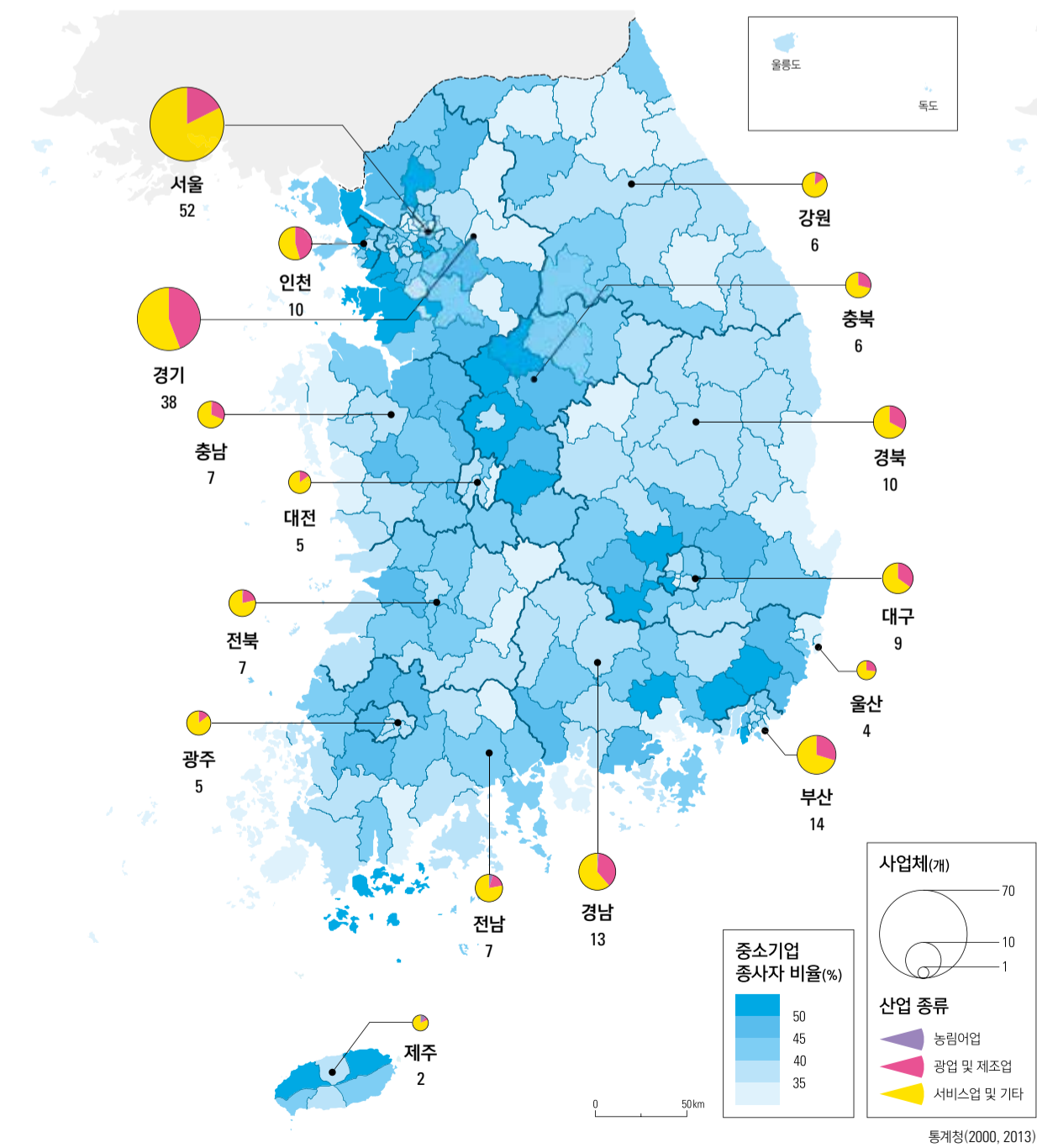
대기업 사업체와 종사자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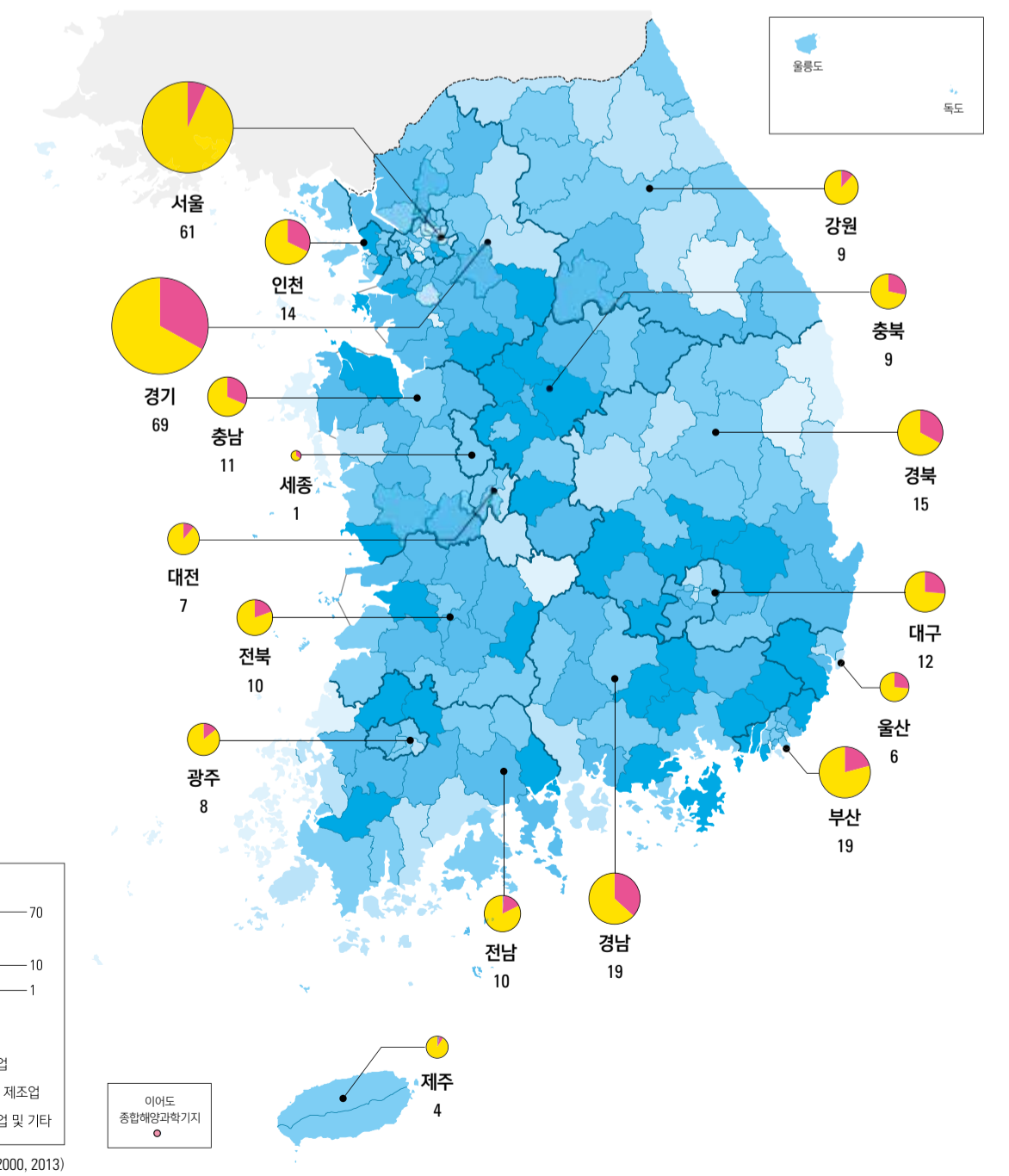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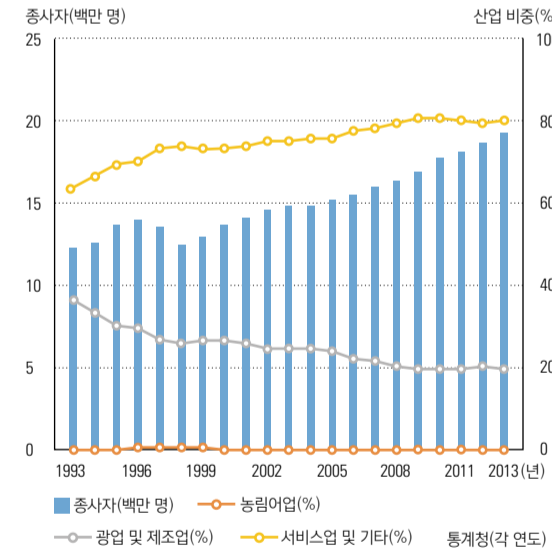
중소기업 사업체와 종사자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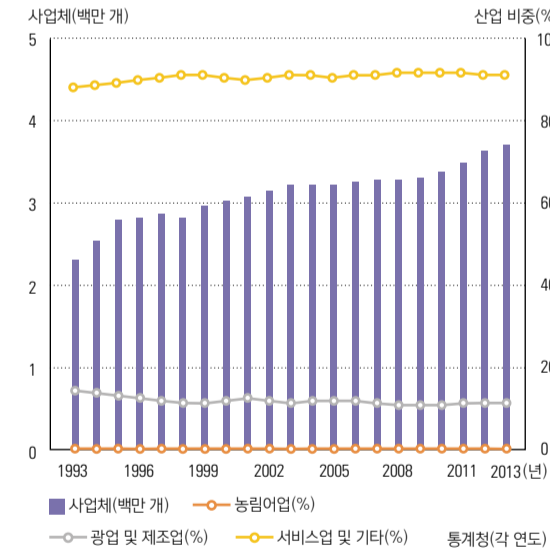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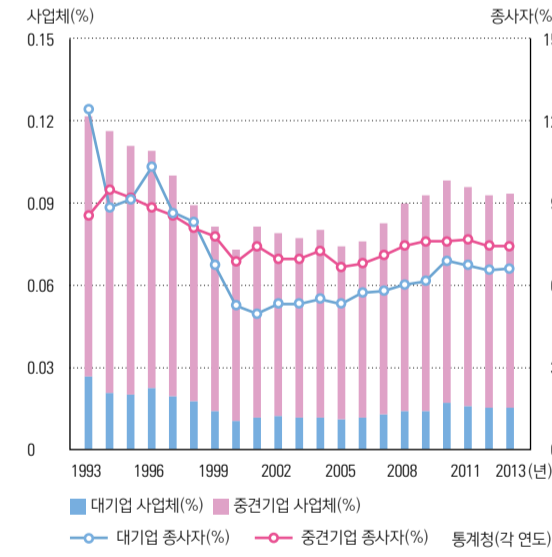
산업별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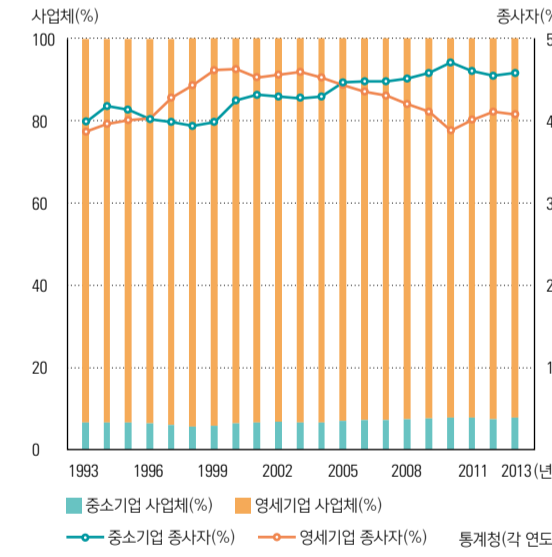
산업별 사업체 추이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및 사업체 추이



중소기업·영세기업 종사자 및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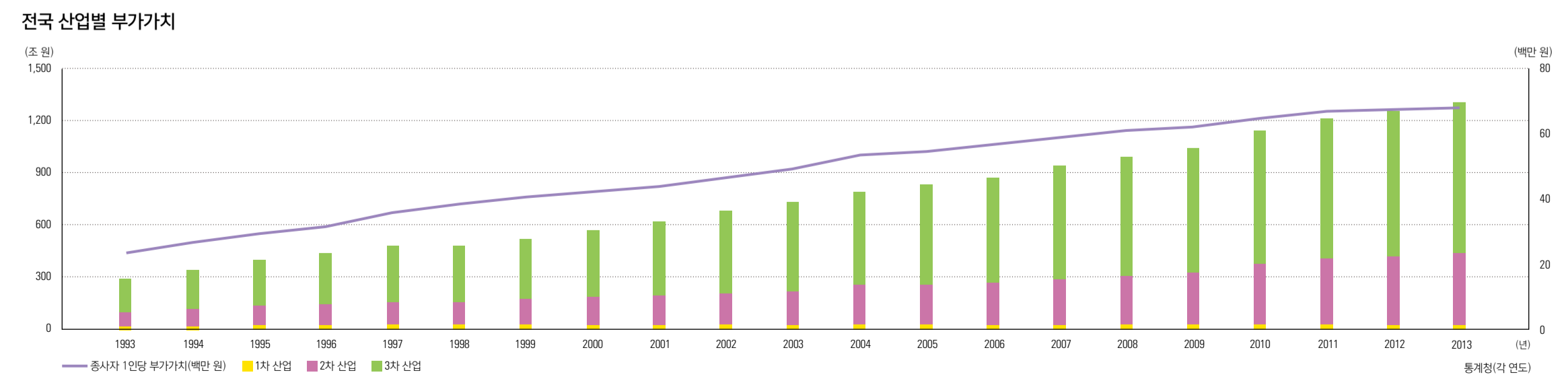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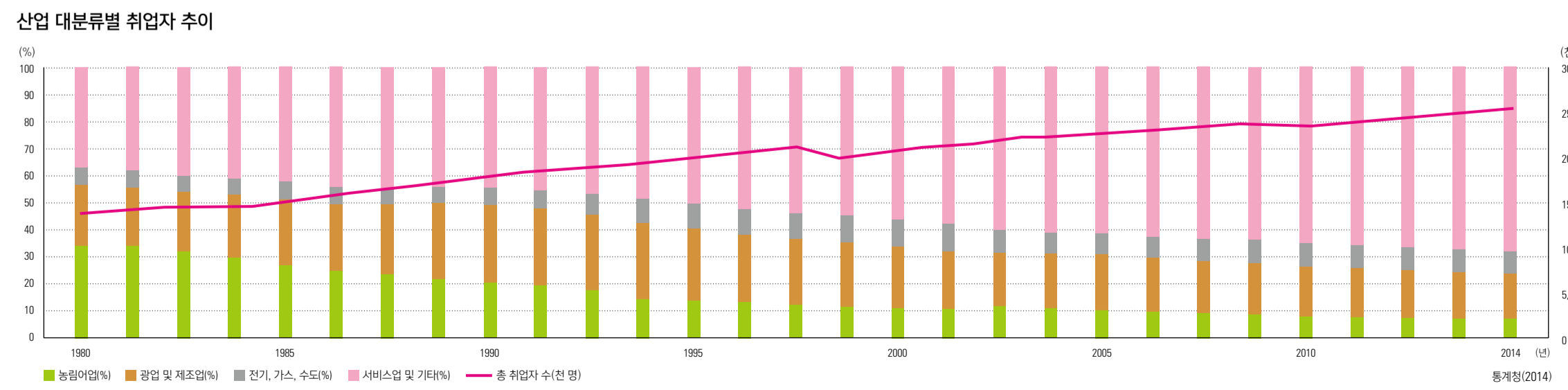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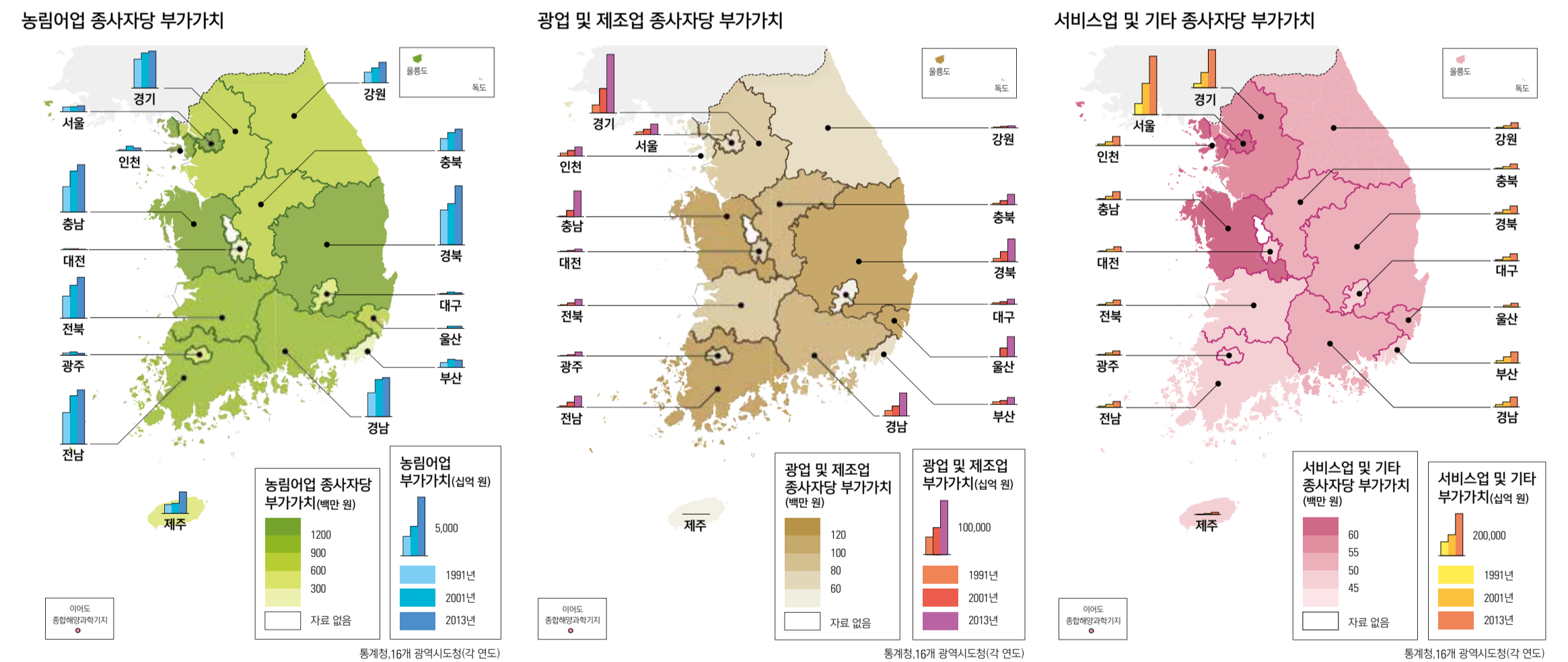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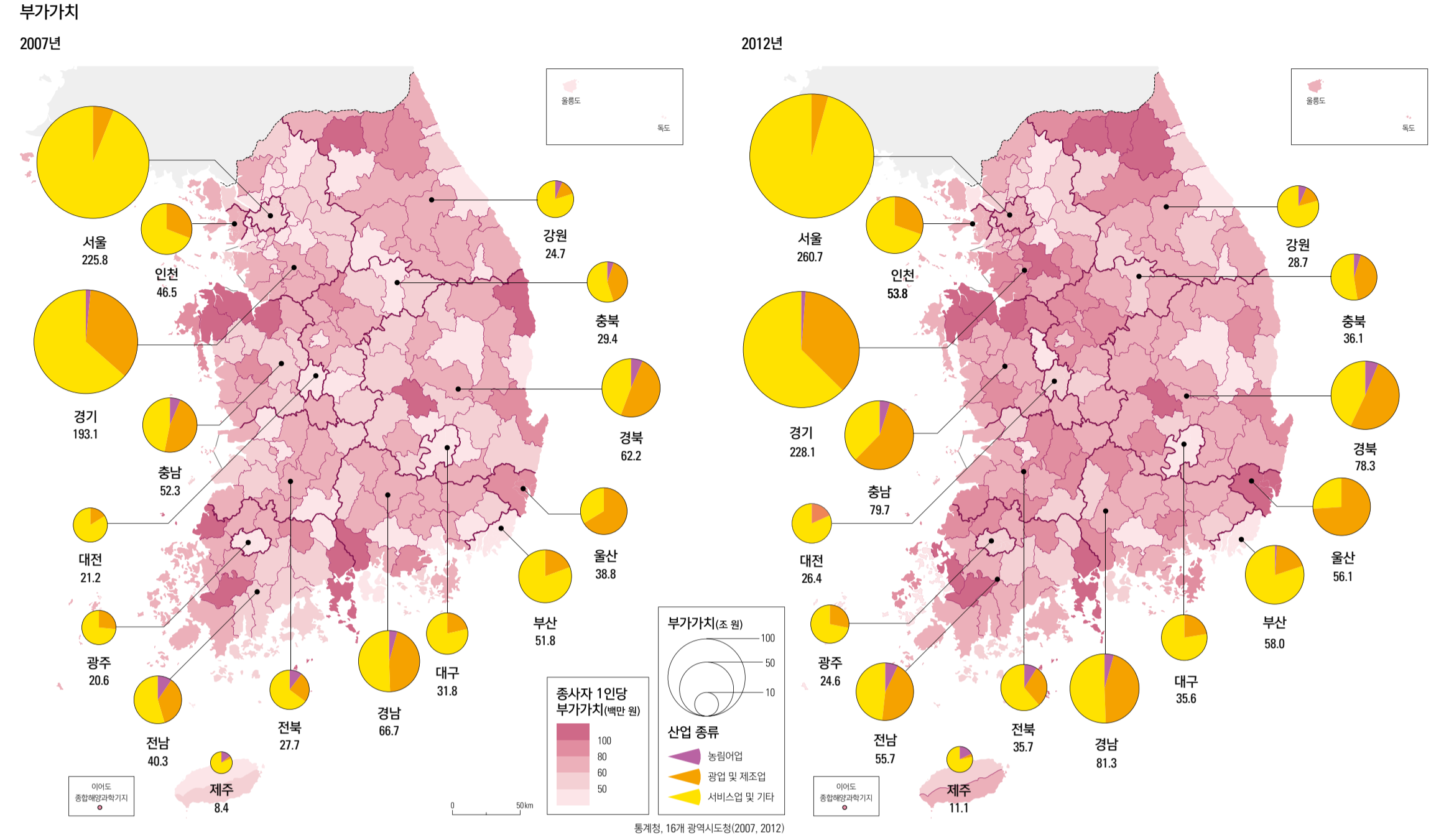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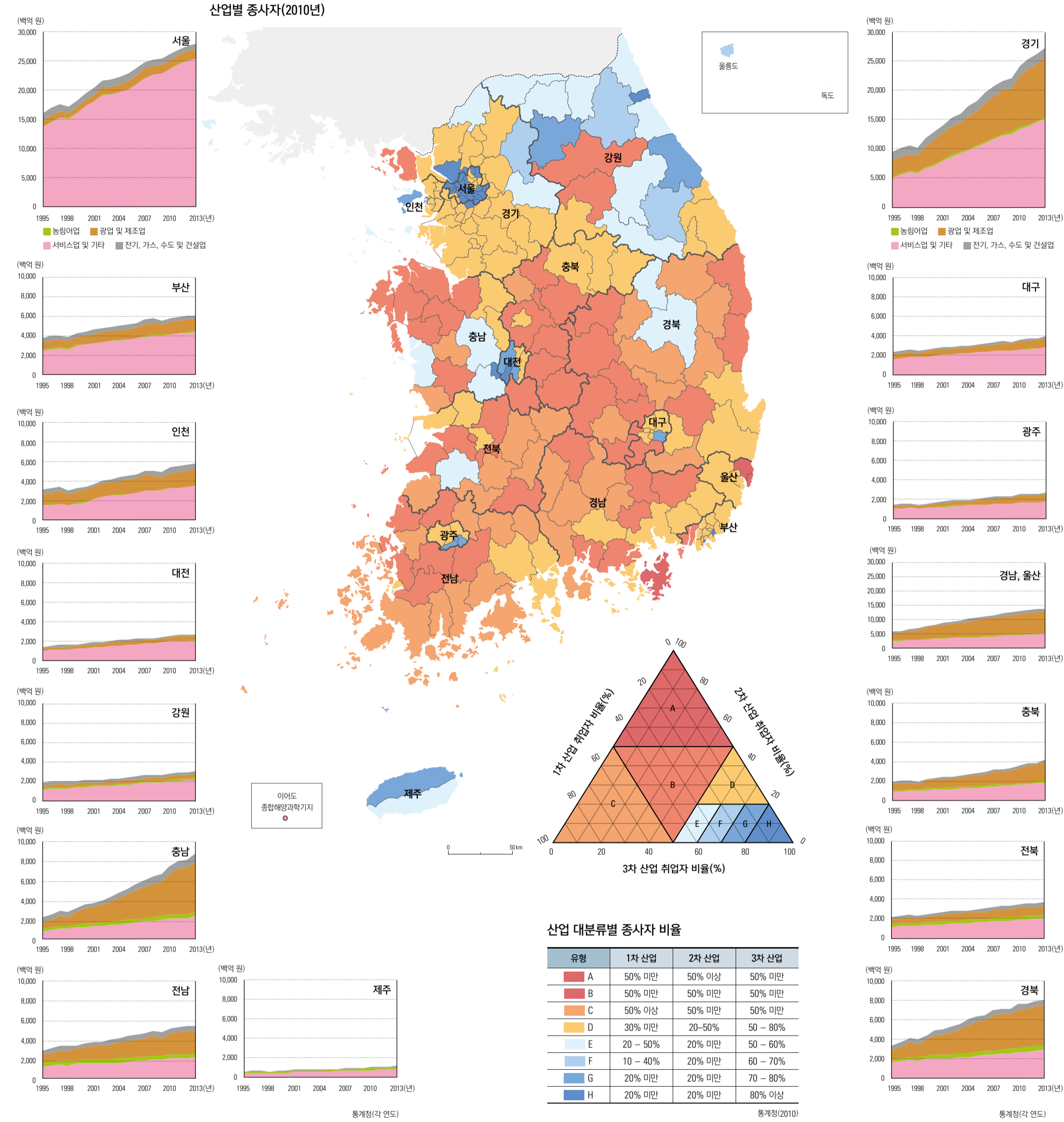
산업 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이후 농업·어업과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광업 및 제조업의 종사자와 사업체 비중은 1993년 32.1%, 12.3%에서 2013년 19.9%, 10.1%로 각각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은 1993년 67.6%, 87.6%에서 2013년 79.9%, 89.8%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과 2013년의 지역별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 강서구(449명→1,391명), 서울 금천구(388명→844명), 서울 중구(2,441명→2,836명), 부산 중구(1,122명→1,458명), 서울 종로구(1,182명→1,472명), 전남 영암(288명→575명), 부산 동구(499명→769명) 등의

지역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도시의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이후 대기업의 비중 감소와 중소기업의 비중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각각 1993년 0.02%, 12.4%에서 2013년 0.01%, 6.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견기업은 1993년 0.09%, 8.6%에서 2013년 0.07%, 7.4%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1993년 6.6%, 40.0%에서 2013년 7.7%, 45.2%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영세기업은 같은 시기에 93.2%, 39.0%에서 92.2%, 40.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과 2013년의 지역별 대기업 사업체 수는 서울(106개→239개), 경기(41개→90개), 충남(10개→23개), 대전(13개→23개) 순으로 증가한 반면, 광주(12개→10개)와 경북(24개→23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13년의 시·군·구별 대기업 종사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울산은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정선(0%→26.3%), 파주(1.9%→14.3%), 서울 용산구(3.9%→15.9%), 서울 광진구(1.1%→12.4%), 서울 강동구(0%→11.0%), 서울 성북구(4.6%→14.7%) 등의 순으로 증가한 반면, 포항(19.2%→5.3%), 울산 북구(43.1%→30.5%), 이천(27.8%→15.6%), 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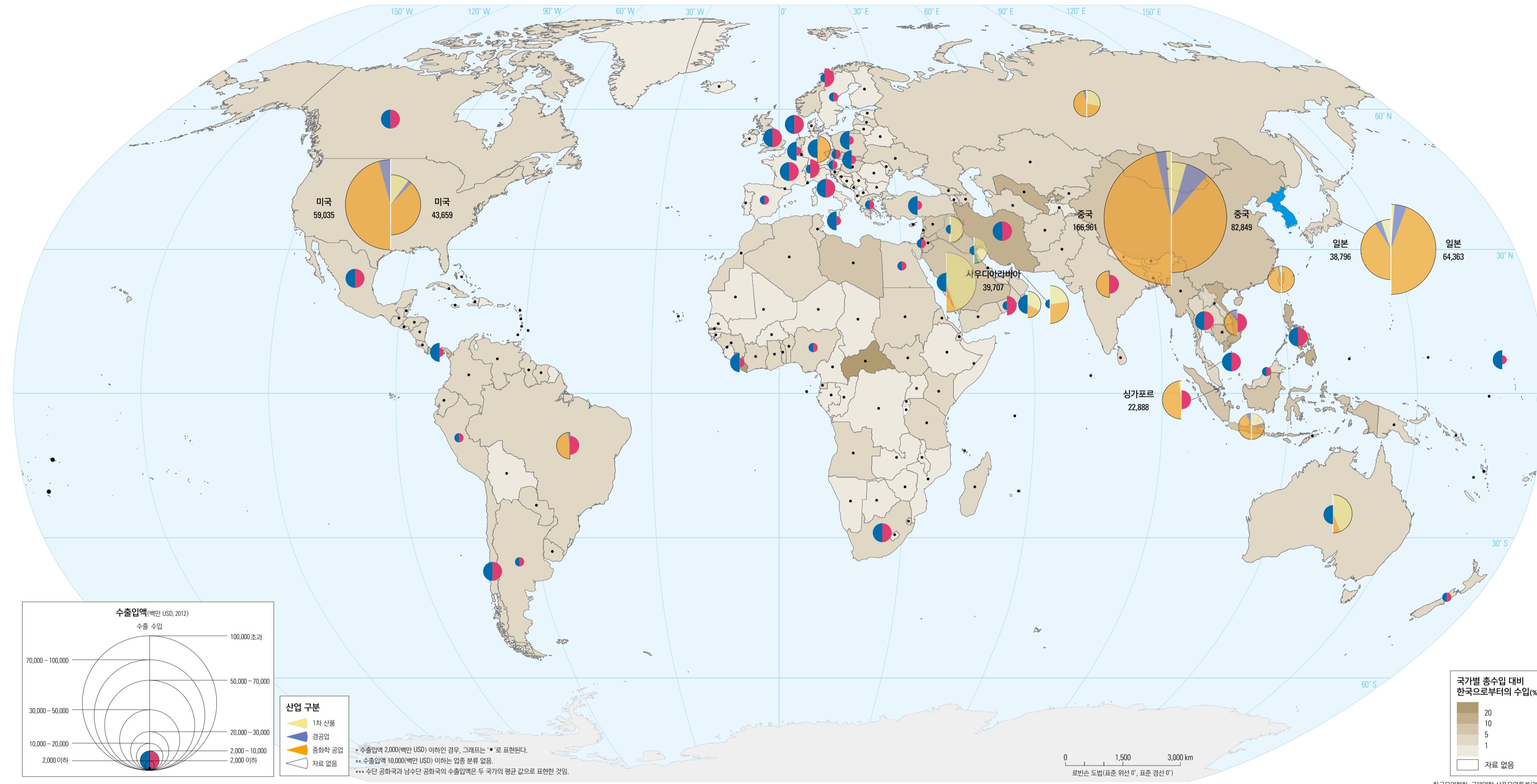
(16.3%→5.3%), 울산 동구(46.3%→36.1%)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2000년 37,630개에서 2013년 68,51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시·군·구별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 영암(40.0%→61.9%), 전북 장수(34.0%→52.2%), 강원 화천(26.8%→43.1%), 부산 강서구(39.5%→55.2%), 포항(32.0%→46.1%) 등의 순이며, 종사자 비중이 감소한 지역은 전남 완도(62.3%→35.9%), 전남 영광(44.4%→34.5%), 강원 정선(34.8%→25.6%), 경기도 시흥(56.3%→48.1%), 경기도 화성(56.9%→49.3%) 등이었다.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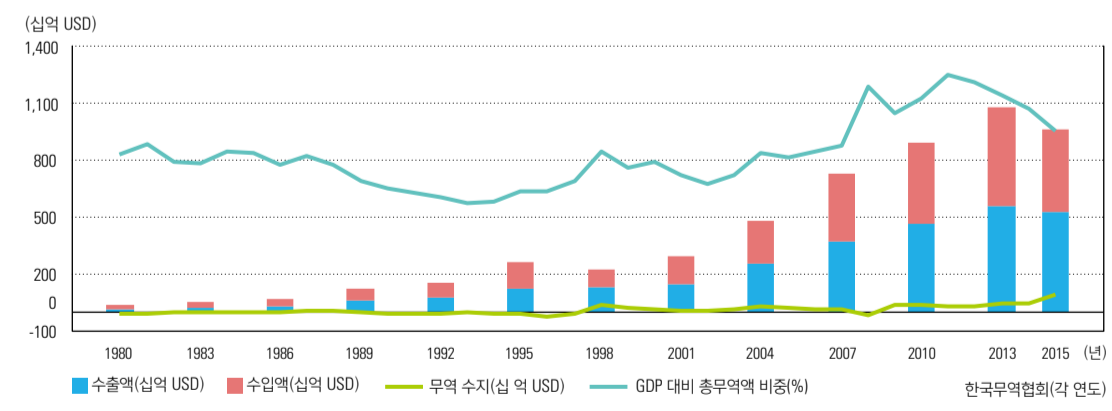


무역과 국제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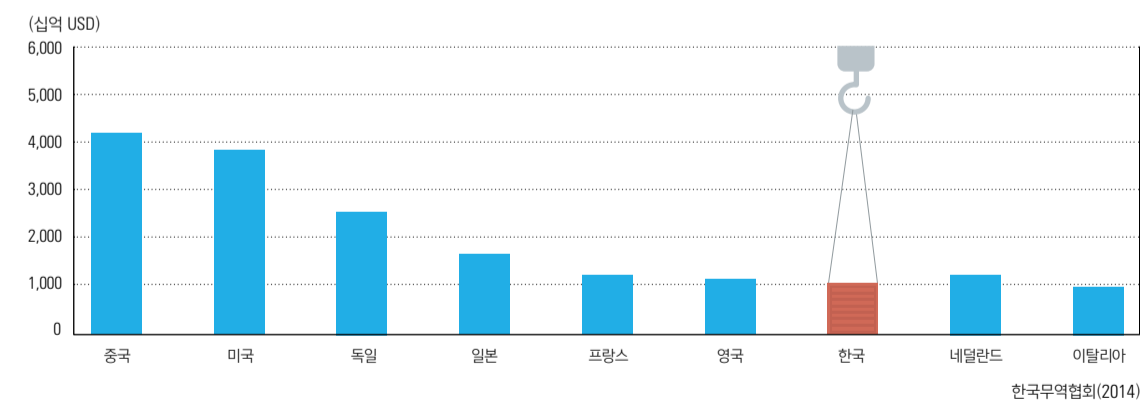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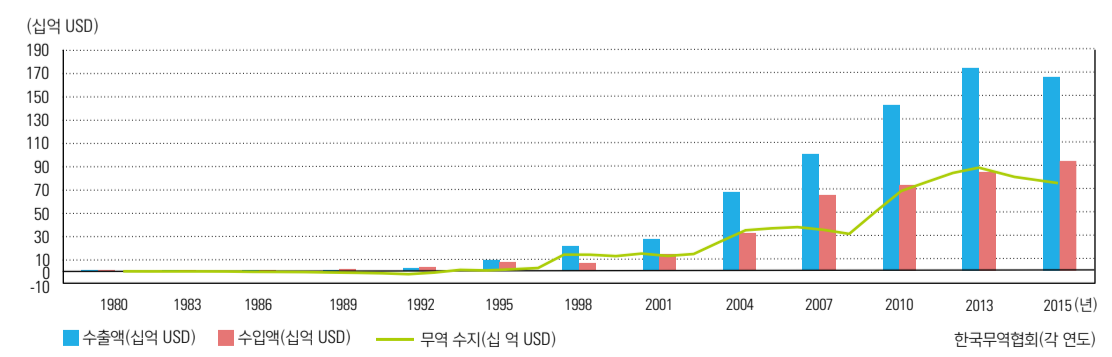
수출입 및 무역 수지와 무역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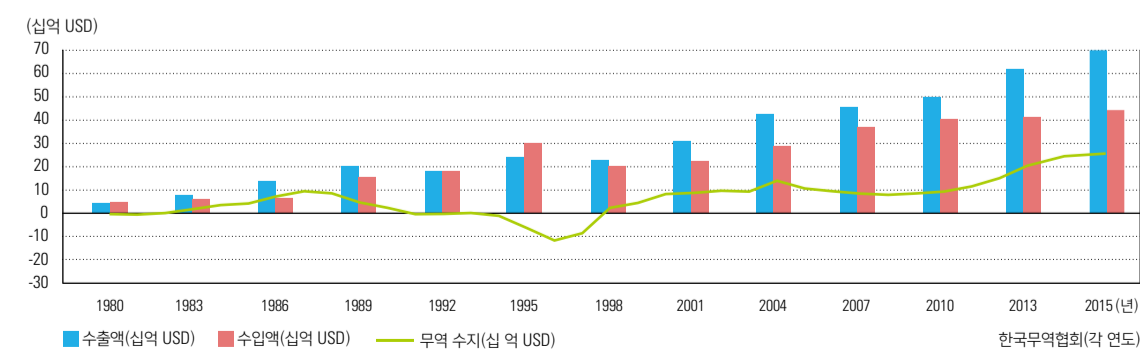
국가별 무역 규모



대중국 수출입 무역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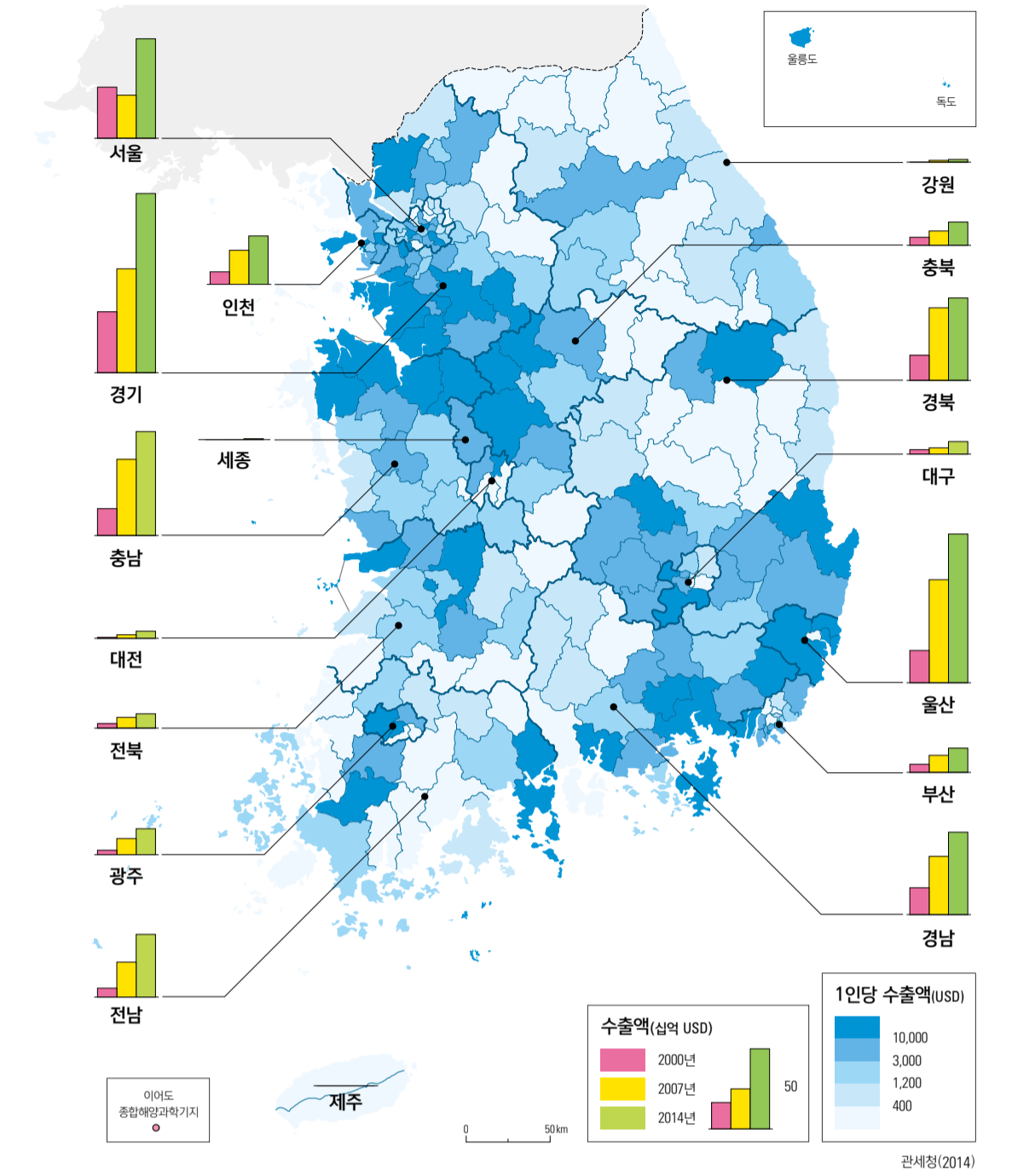
대미국 수출입 무역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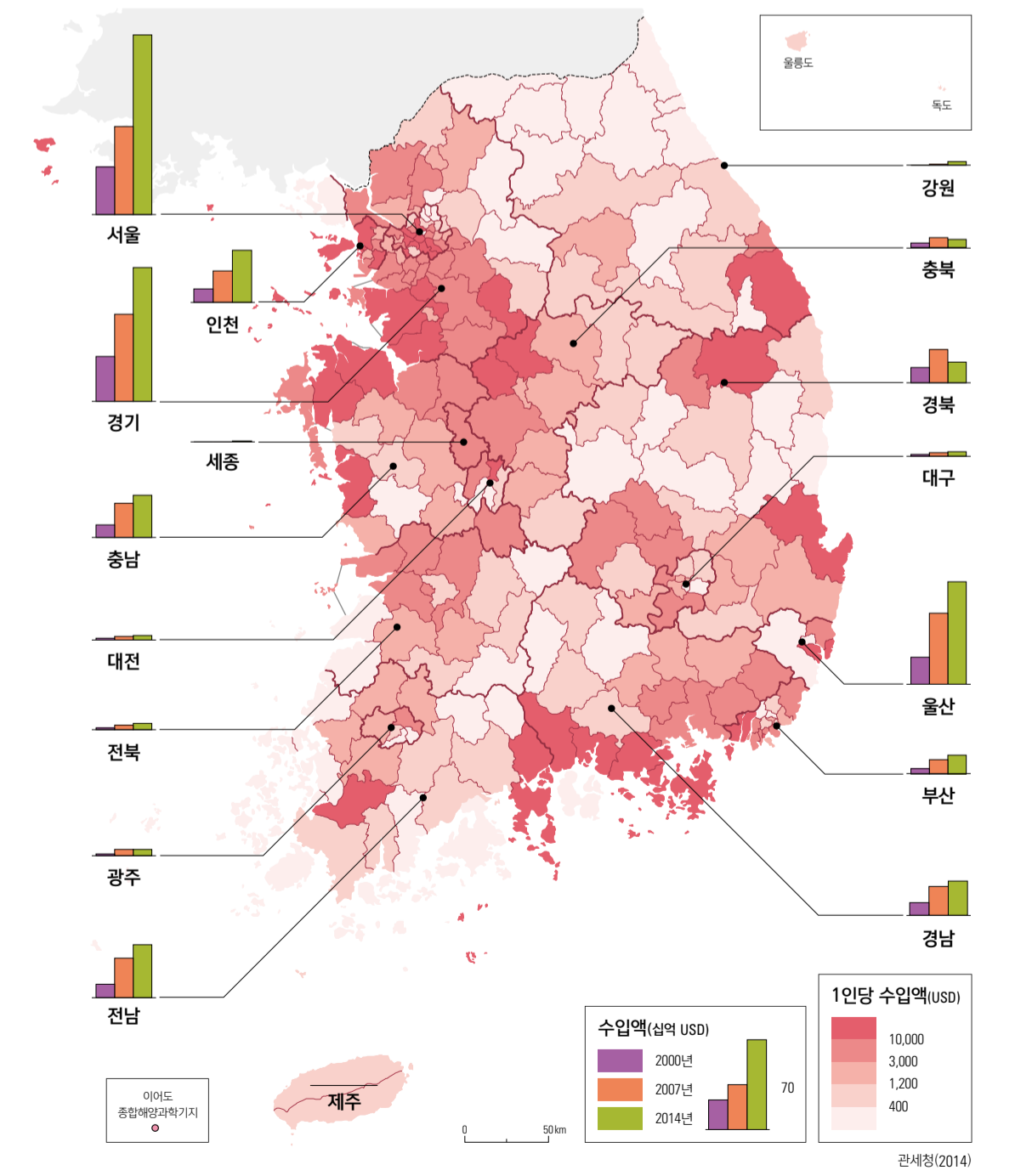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제 무역의 급성장은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2012년 1조 USD를 돌파하여 2013년 현재 1조 752억 USD(수출: 5,596억, 수입: 5,155억)를 달성하였다. 특히,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13년 현재 82.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이었으며,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1위 무역 대상국이 된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무역액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수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9.5%)이며, 울산(16.1%), 충남(11.4%), 서울(10.9%), 경북(9.0%)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은 서울(26.7%), 경기(19.9%), 울산(15.2%), 전남(8.0%), 인천(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141,216USD)이며, 울산 북구(111,162USD), 울산 울주(107,019USD), 여수(104,627USD), 울산 동구(100,163USD)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수입액은 울산 울주가 165,866USD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중구(162,855USD), 충남 서산(127,772USD), 전남 여수(113,388USD), 울산 남구(104,069USD)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수출(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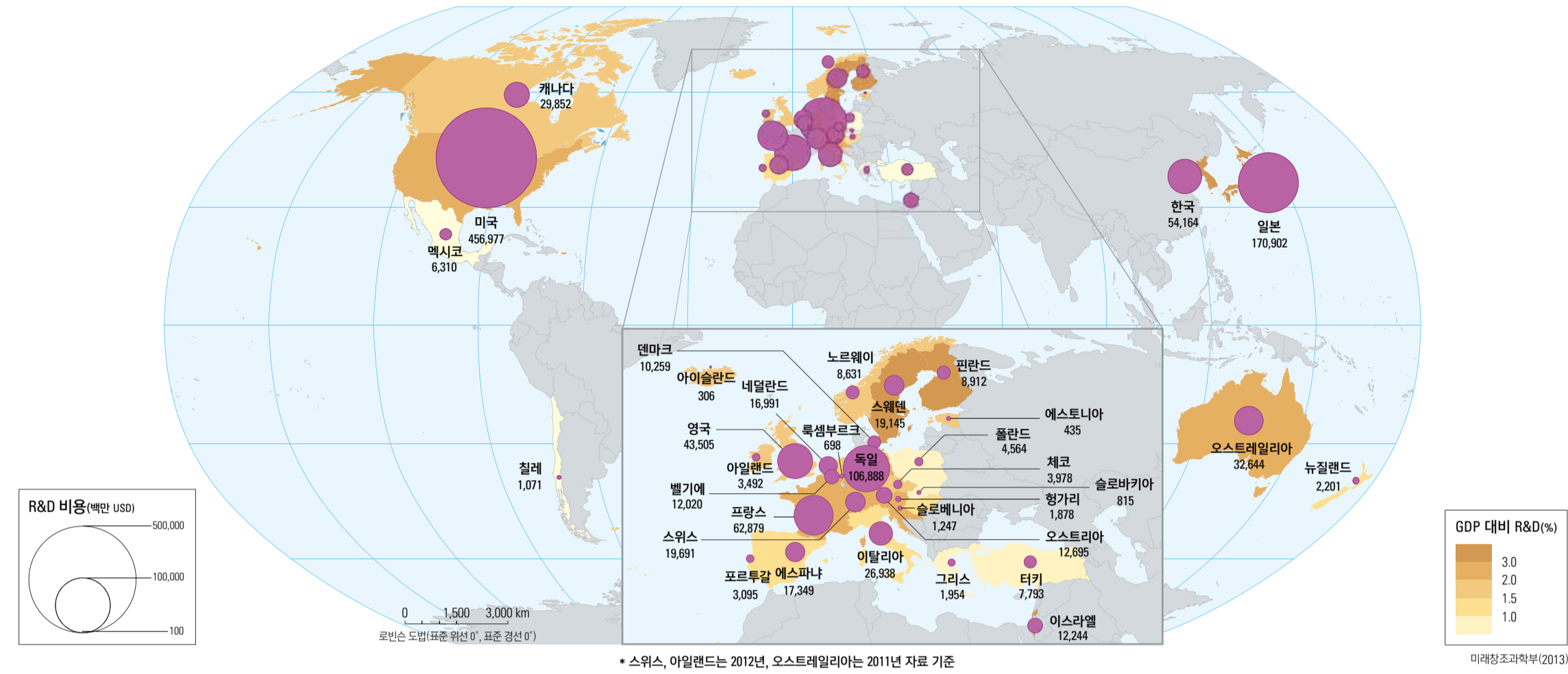


시·도별 수입(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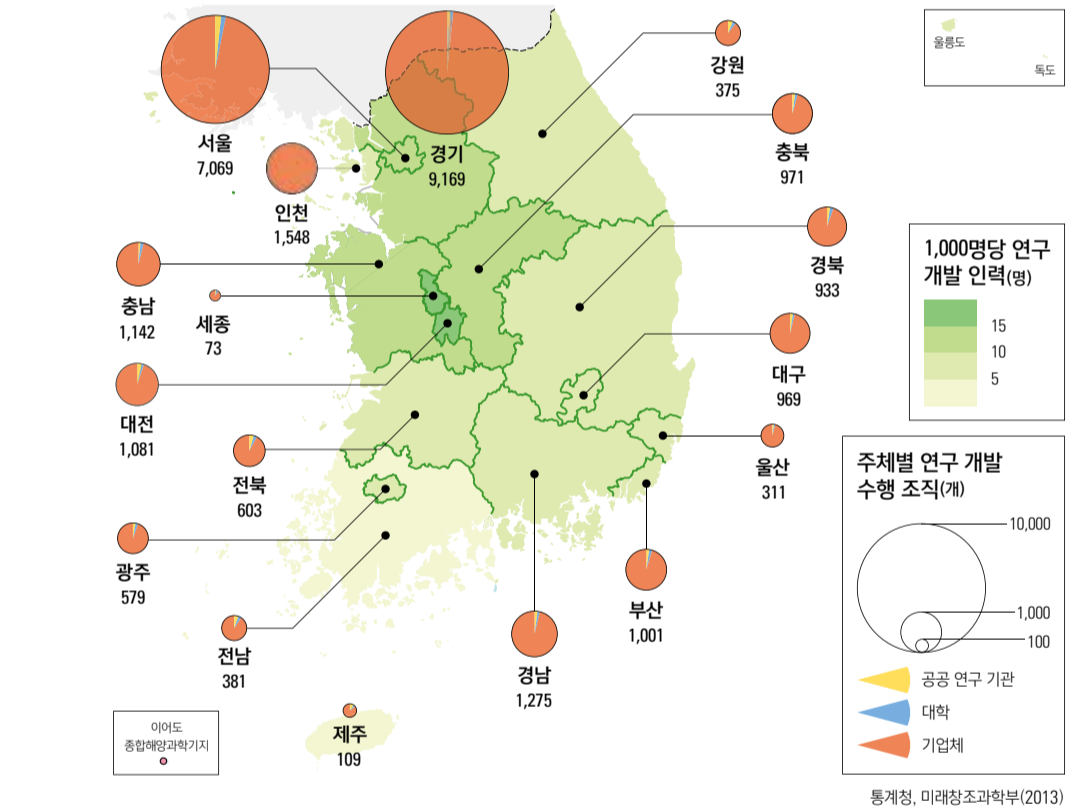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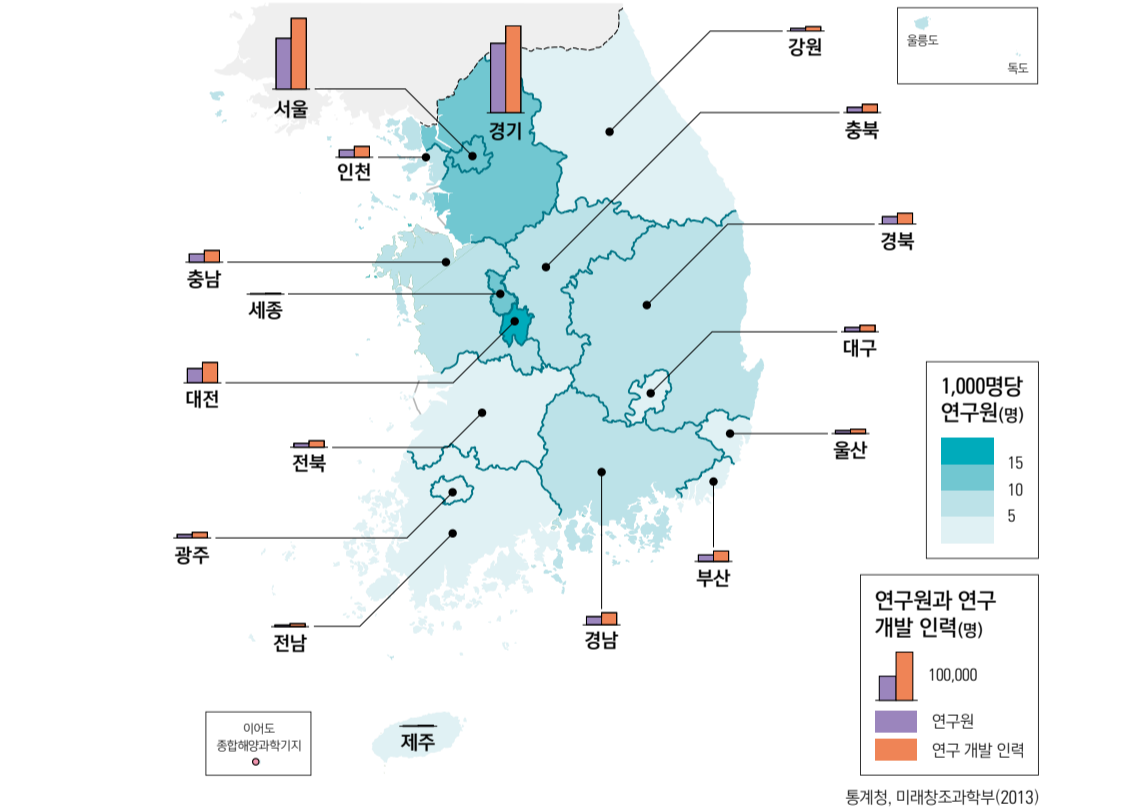
OECD 국가별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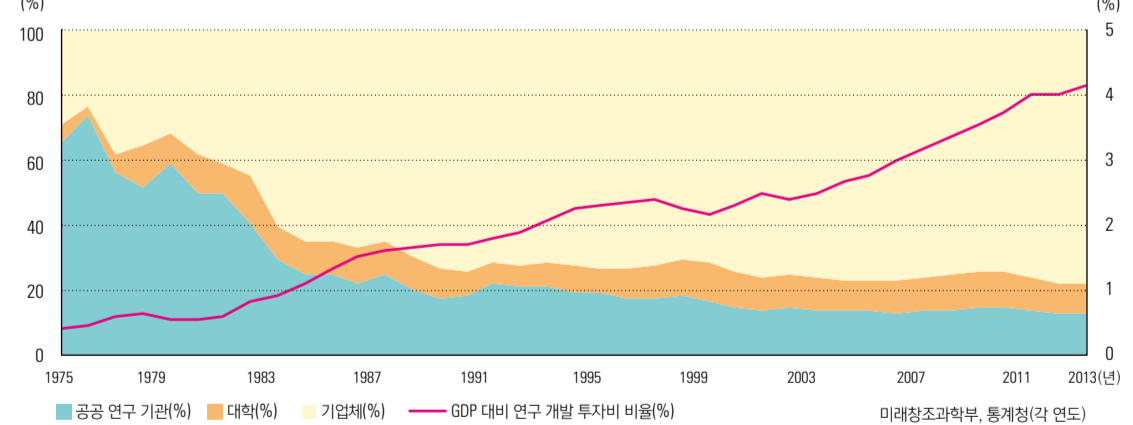
연구 개발 인력 및 조직(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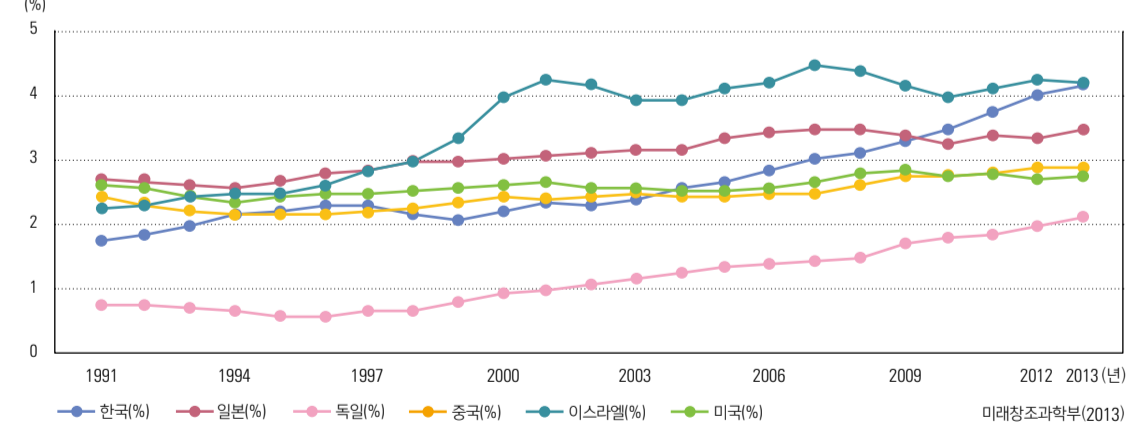
연구원 수(2013년)



주체별 연구 개발 수행 조직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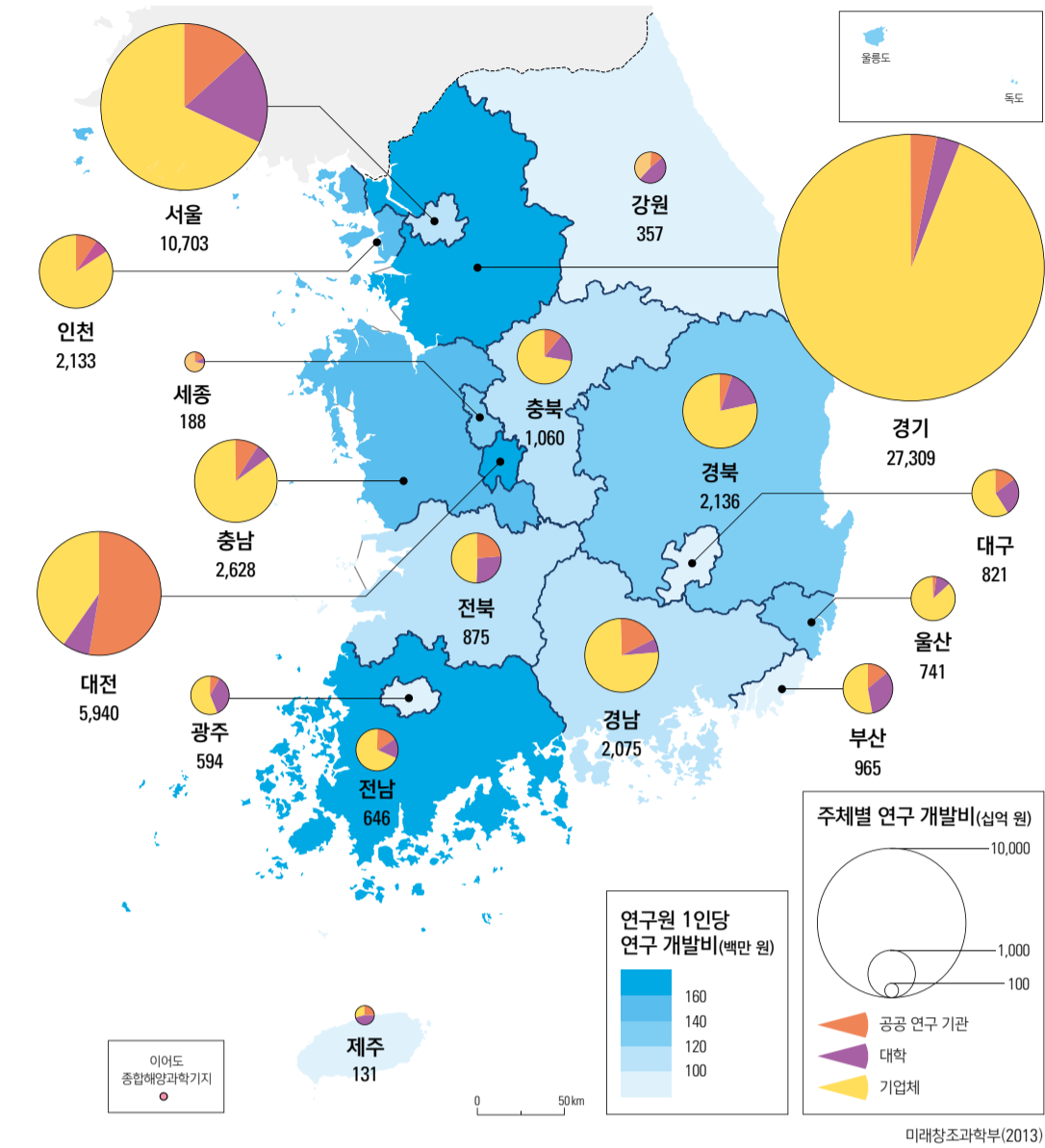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연구 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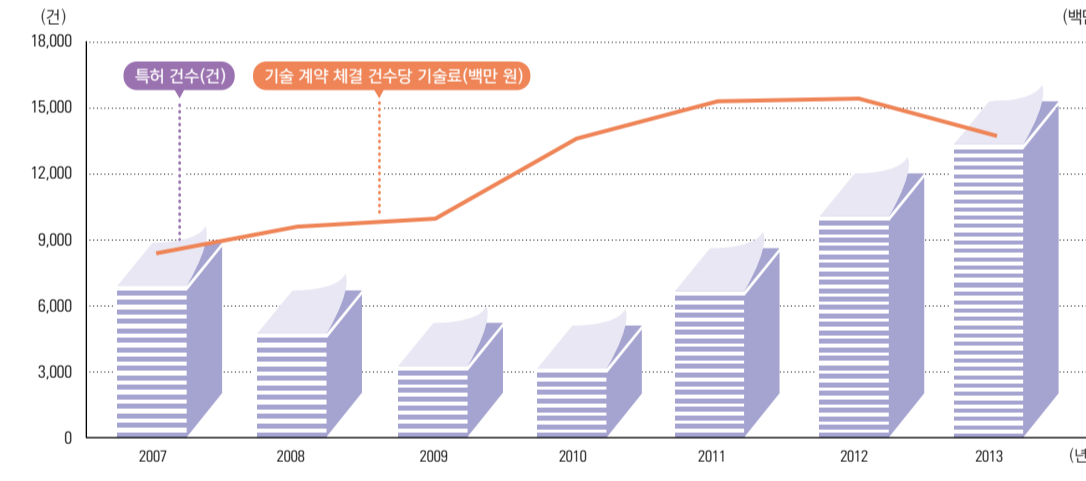
한국의 산업은 1980년대 이후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OECD 국가별 GDP 대비 R&D 비중을 통해 한국의 연구 개발 위상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이스라엘이 4.2%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4.1%로 이스라엘에 이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

어 일본(3.5%), 핀란드(3.4%), 스웨덴(3.3%), 덴마크(3.1%) 등의 국가가 R&D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연구 개발 수행 조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공공 연구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기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부터 기업체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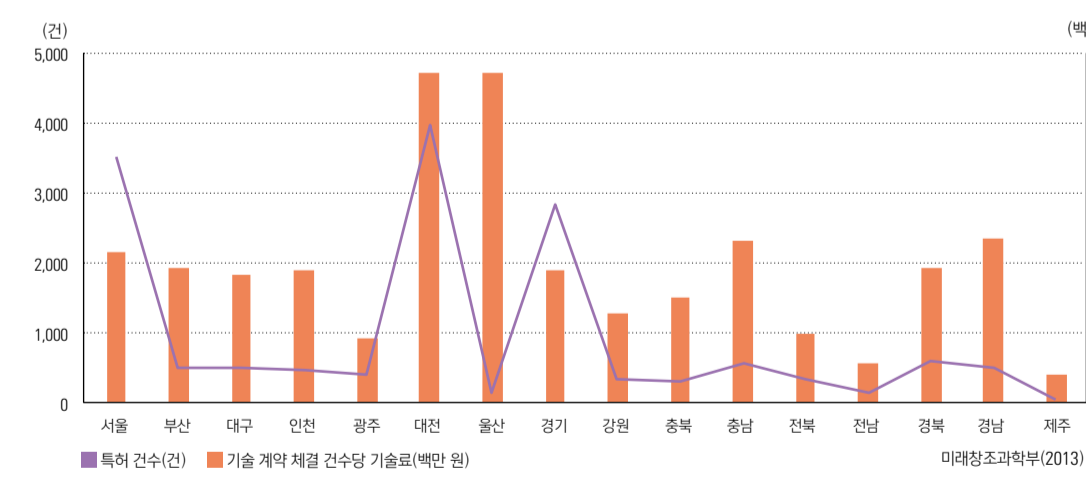
시·도별 연구 개발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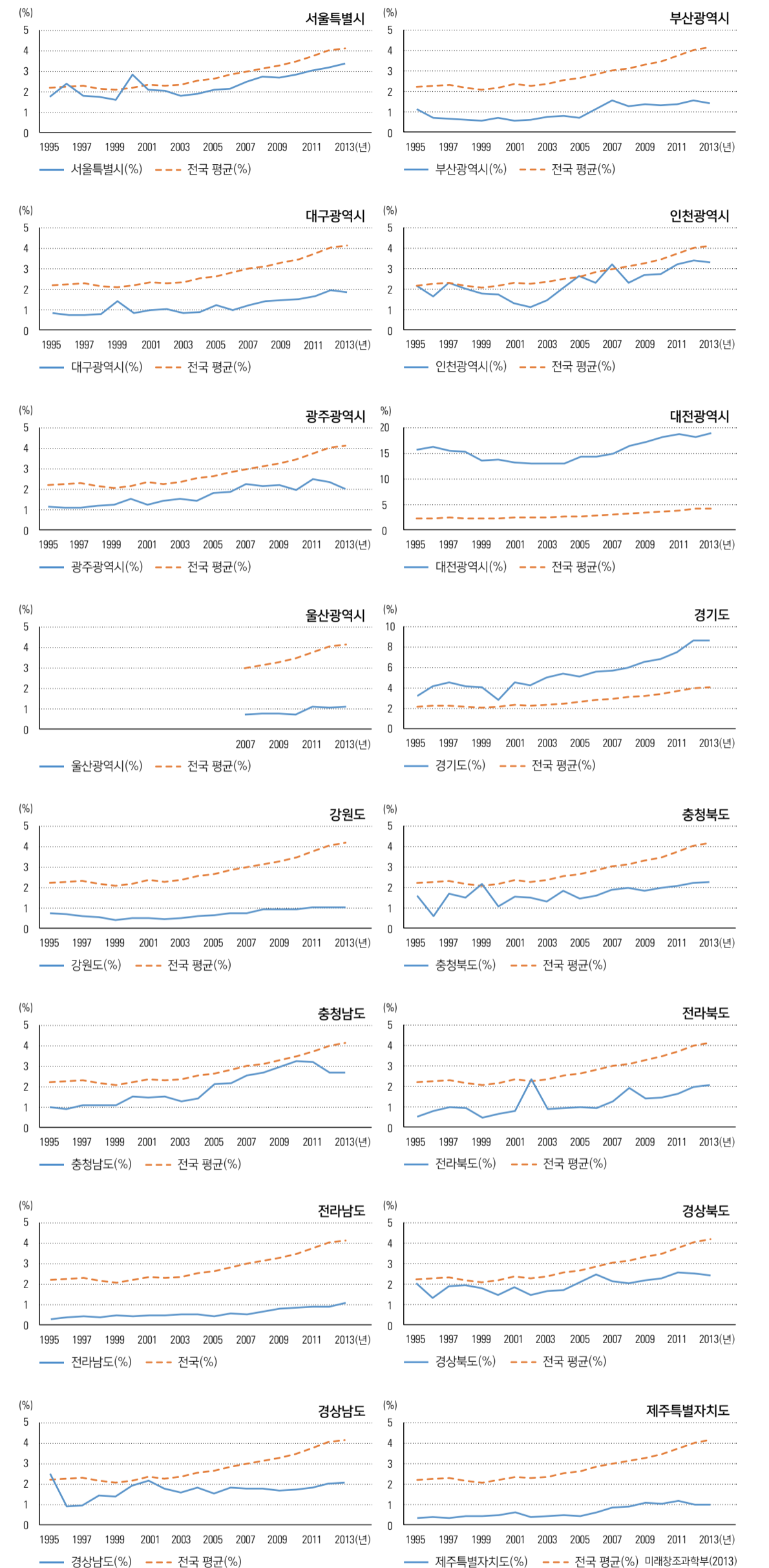
특허 건수, 기술 계약 체결 건수당 기술료 추이(2007 - 2013년)



특허 건수와 기술 계약 체결 건수당 기술료(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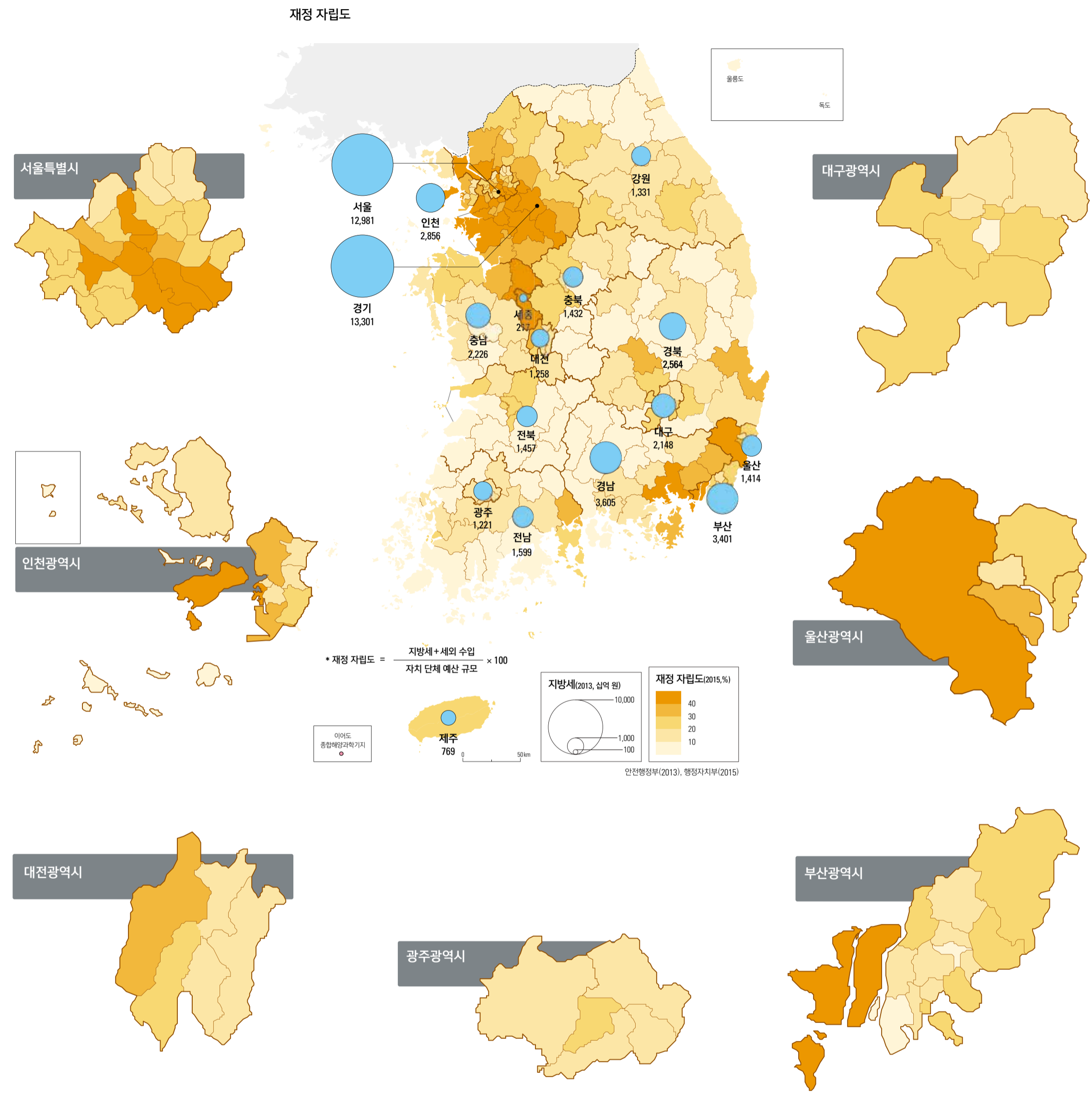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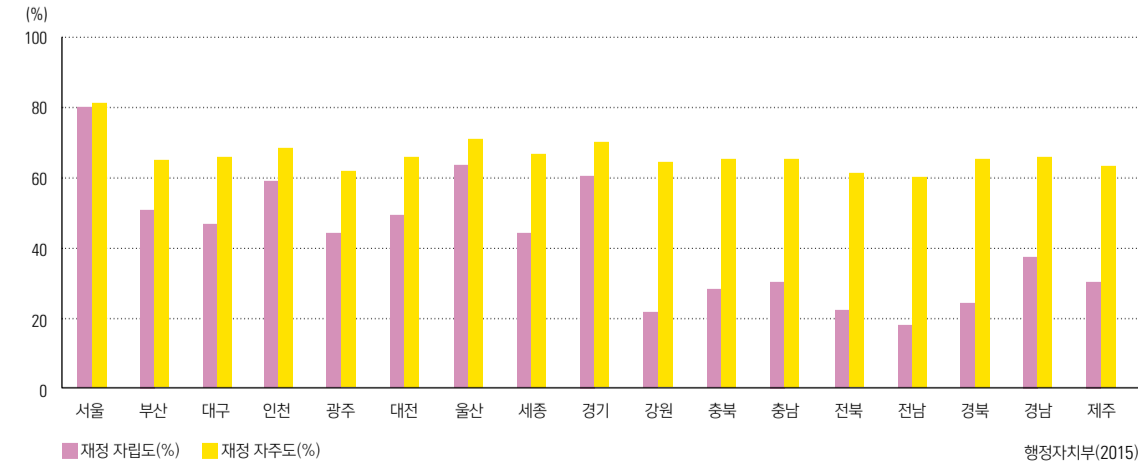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의 비중은 1%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에 2%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현재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1973년 과학기술부가 대전 유성구에 3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과학 기술 연구 단지를 설립하면서 대전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15.5%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18.9%를 차지하여 대전에 연구 개발 투자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술 집

약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이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3.2%에서 2013년에 8.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시·도별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대전은 3,995건(26.5%)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23.4%), 경기(18.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모두 4% 미만으로 대전, 서울, 경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도별 기술 계약 체결 건수 당 기술료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대전과 울산의 기술 계약 체결을 통한 평균 기술료는 9,4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기술료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의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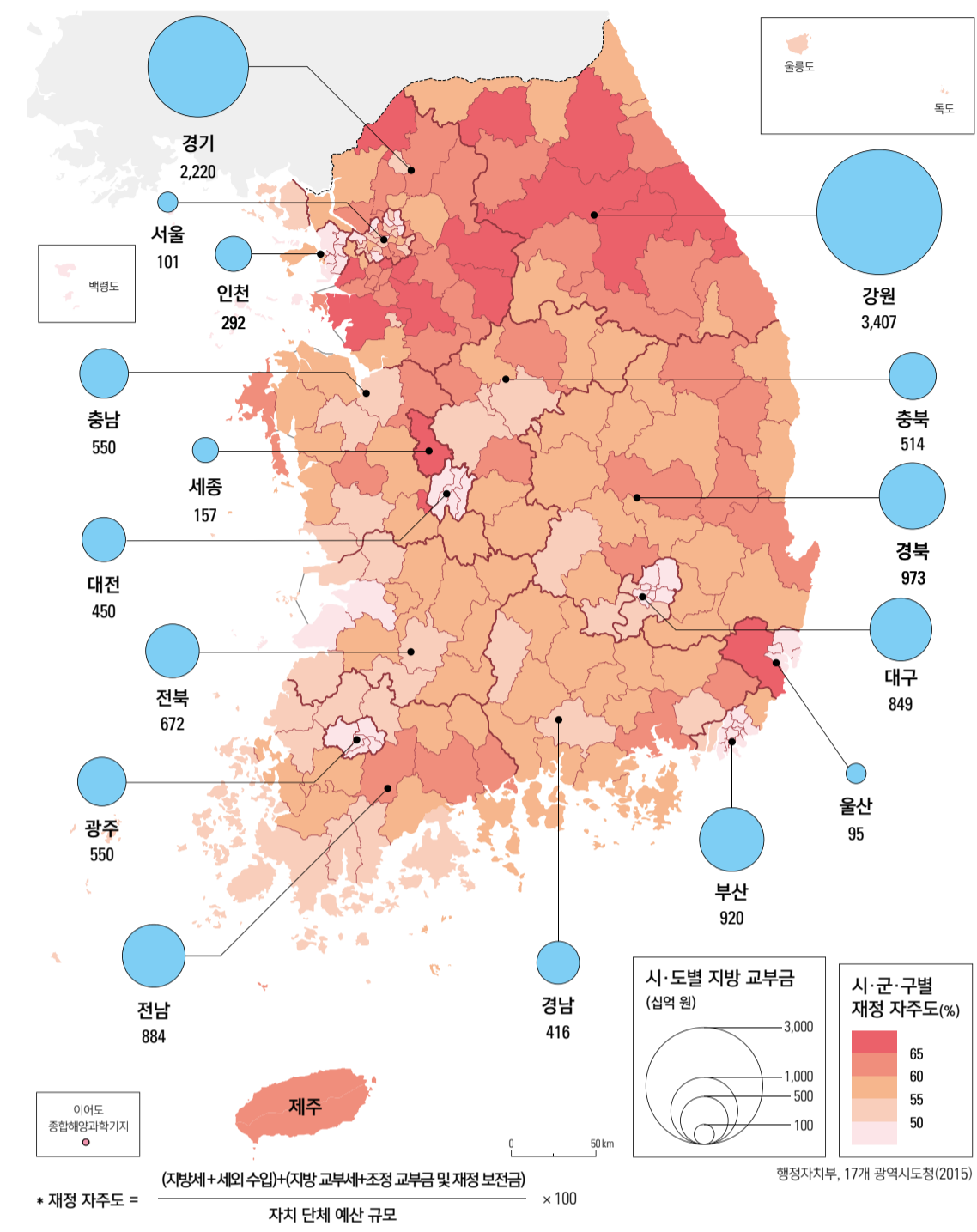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현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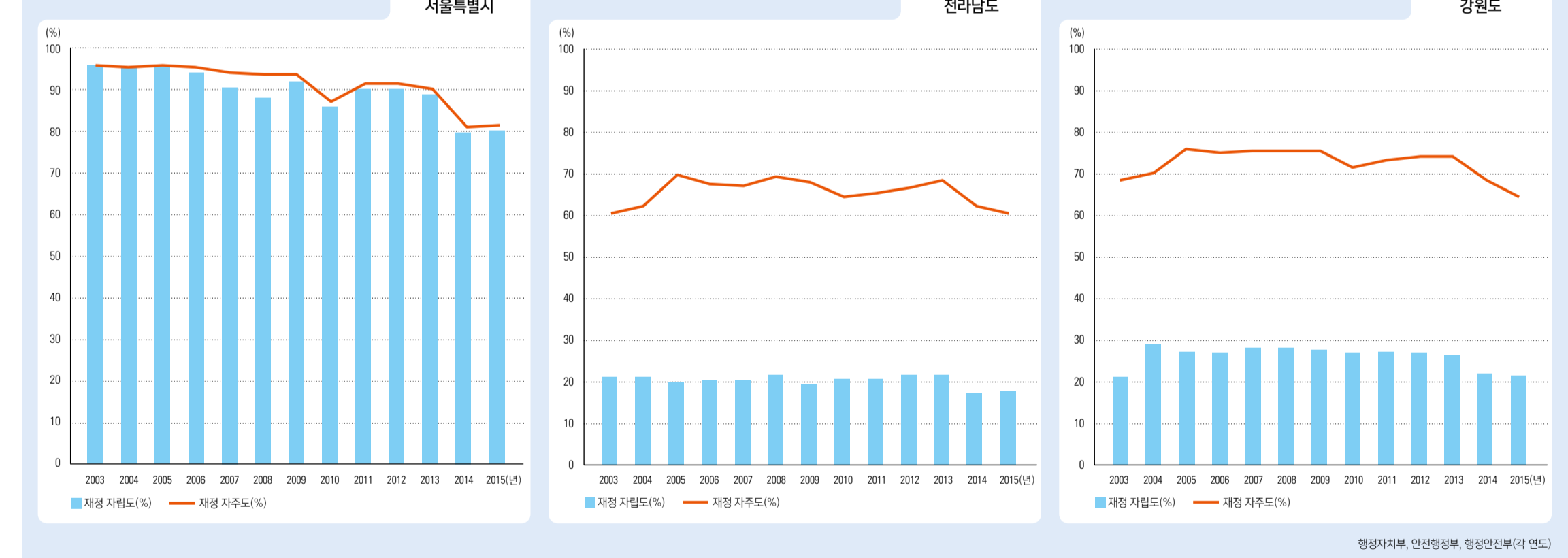
재정 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예산(일반 회계 예산 규모)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 비율로 측정하며, 재정 자주도는 자기 단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과 더불어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추가 포함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는 세입에 초점을 두며,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 초점을 둔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 자치 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한편,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립 또는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 자치 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2%에서 2015년 45.1%로 낮아져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중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은 부산(63.6%), 경기(60.7%), 인천(59.1%), 부산(51%) 등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반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전남(17.8%), 강원(21.5%), 전북(22.5%) 등이다. 서울, 인천, 울산 등의 시·군·구별 재정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자치구별 평균 재정 자립도는 각각 31.5%, 23.8%, 26.4%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이며, 낮은 지역은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변화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0.3%)이며, 그 뒤를 이어 울산(63.6%), 경기(60.7%), 인천(59.1%), 부산(51%) 등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반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전남(17.8%), 강원(21.5%), 전북(22.5%) 등이다. 서울, 인천, 울산 등의 시·군·구별 재정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자치구별 평균 재정 자립도는 각각 31.5%, 23.8%, 26.4%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이며, 낮은 지역은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재정 자주도는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급락한 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금 등의 증가로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전국 평균 재정 자주도는 78.9%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 재정 자주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이며, 낮은 지역은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등으로 나타났다.

고 있는데, 이는 사회 복지 등 국가 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평균 재정 자주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는 2009년 71.5%에서 2015년 60.1%로 하락하였으며, 군은 64.6%에서 57.5%로 하락하였고, 자치구는 61.8%에서 42.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1.4%)이며, 그 뒤를 이어 울산(71.1%), 경기(70.0%), 인천(68.4%) 등이 자주도가 높은 반면,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역은 전남(60.5%), 전북(61.1%), 광주(62.0%) 등이다.

최근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감소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재정 자주도-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중앙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43.1%)과 전남(42.7%)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남과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17.8%, 21.5%, 재정 자주도는 각각 60.5%, 64.6%이었다.